*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각 집필자 소속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IFES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23-12 (No. 72), 2023. 12

2023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2024년 전망

사　　회 : **이 관 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발　　표 : **김 흥 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전 봉 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정 영 철 (서강대 교수)

토　　론 : **마 상 윤** (가톨릭대 교수)
조 진 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성 기 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 상 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박 노 벽 (전 주러시아 대사)
이　　철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최 용 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 을 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14:00~18:00

장　　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1층)/온라인

I F E 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목차

| 제1세션 |

【한·미·일】 **한·미·일 협력 구조 변화의 작용·반작용**

【발표】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3

【토론】 [미국] 마상윤(가톨릭대 교수) / 27
[일본]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33
[한국]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53

| 제2세션 |

【북·중·러】 **북·중·러 밀착의 현재, 동인, 그리고 전망**

【발표】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 65

【토론】 [중국]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87
[러시아] 박노벽(전 주러시아 대사) / 93
[북한] 이철(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 105

| 제3세션 |

【남북관계】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 한반도: 북한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발표】 정영철(서강대 교수) / 117

【토론】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교수) / 133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137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14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 153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 159

회원가입 안내 / 177

제1세션

한·미·일

발표

한·미·일 협력 구조 변화의 작용·반작용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토론

[미국] 마상윤(가톨릭대 교수)

[일본]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한국]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1세션: 한·미·일_발표

한·미·일 협력 구조 변화의 작용·반작용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1. 서론

2023년 한국 외교안보의 최대 사건은 예년과 같은 북한(핵)문제가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회동하여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동 사건에 대해 "한미일 협력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되었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동 행사를 설명할 때마다 "역사적," "처음으로," "획기적" 수식어가 수시로 따랐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로, 한국이 미중 경쟁과 동북아 지정학적 경쟁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2024년에도 한중 및 미중 관계가 북핵문제와 더불어 한국 외교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이전에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다자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렸고, 단독으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캠프 데이비드가 처음이었다.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고 선

언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다자차원에서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역사상 최초”라고 평가했다.[1] 윤석열 대통령은 한민주평통 행사(2023.8.29.)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가안보전략의 의미를 부여했다.[2]

첫째, (한미일 협력의 성격과 임무) 한미일 3국은 처음으로 단독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 대국, 첨단 과학기술국인 3국의 연대가 중요하다. 3국은 자유·인권·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3국 협력 제도화)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합의문을 채택했다.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한다.

셋째, (중국 견제)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1) 통일부 “다자차원 한반도 통일비전 합의, 역사상 최초,” 헤럴드경제, 2023.8.22.

2)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윤석영 대통령 모두 발언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flp0kQns.

넷째, (북핵 위협 대응)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을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을 신설한다.

요약하면, 한국 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무장으로 인해 발생한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직면하여, 한미일 3국이 공동 가치와 국익을 지키고, 역내의 현상 변경을 반대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포괄적 안보 협력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된다면, 이 정상회의는 동북아 지역 질서와 한국 외교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탈냉전기뿐만 아니라 냉전기에도 북·중·러(소) 3국을 명시적으로 경쟁 상대로 규정하거나, 이를 상대로 한일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합의하고 실행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에 합의했을까? 과연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은 한국의 안보 국익에 부합하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3자 협력이 유명무실화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글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대한 국내적인 찬반 입장을 토론하고, 이어서 3자 안보협력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요인과 동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작용하는 변수와 그 동학을 파악하게 되면, 안보협력의 미래도 더 정확하게 전망하게 될 것이다.

2. 캠프 데이비드 3국 합의에 대한 엇갈린 평가

가. 남남갈등의 재현

분열과 갈등의 국내 정치를 반영하듯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종래 남남갈등은 주로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진보 진영은 한반도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중시했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남갈등이 미중 전략경쟁, 동북아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동북아 세력경쟁과 진영화, 한미일 가치 연대, 자유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진영의 충돌, 한미일과 북·중·러 대치, 한중간 국익과 가치의 충돌 등을 기정사실로 하고, 역사적 필연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로 보았다. 이들은 가치 연대와 지정학적 경쟁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인해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가 더욱 나빠지고, 북·중·러 협력을 촉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거나, 불가피한 부작용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들은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때늦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을 환영했다. 이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믿으면서, 혹시 국내정치적 변동으로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3자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상반되는 국제정치관, 한반도 평화관에 근거하여 3자 안보협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3자 안보협력 합의가 북·중·러 협력을 촉진하고, 그 결과 동북아의 진영화와 신냉전을

고착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 관계가 악화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한중 관계도 악화하여 중국의 경제적, 안보적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3자 정상회의의 승자는 미국과 일본이며, 한국은 패자라고 평가한다. 미국은 냉전기부터 추진했던 '동북아판 NATO'를 진전시켰고, 일본은 대중 경쟁에서 한국을 최전선에 앞세워 군사적 대치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유엔사를 활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계속 연장하는 결과를 낳고, 한국을 대중 견제의 최전선으로 내몬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아래에서는 긍정, 부정적 평가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다. 이들의 입장이 매우 대조적인 데다 상당 기간 이런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의 핵심 주장을 인용했다. 우선 긍정적인 평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전 북핵 대사의 논평이 있다.[3] 이 대사는 3국 안보협력에 대해,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노리는 거대 중국의 위협에 저항하는 자유민주 진영 연합"이자, "아태지역 최강의 안보 협력체"가 탄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동아시아에서 한일 갈등을 극복하고 유럽의 NATO에 상응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미국 외교의 오랜 꿈"과 "동질적 소속 그룹이 없는 외로운 외교적 입지 때문에 빈번히 적대적 주변국의 압박과 위협에 직면하곤 했던 한국 외교의 오랜 소망"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 학술회의(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2023.11.2.)에서 "한미일 3국 협력과 동북아의 미래" 발표문에서 3국 안보협력 기제를 창출함으로써, 한미일 안보의 상호 연관성을 현실로 구현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중·러 삼각관계의 긴밀

3) 이용준, "캠프 데이비드, 자유민주 진영 떠받칠 두 번째 기둥 세웠다" 조선일보 칼럼, 2023.8.23.

화를 견제하고, 중국의 외교적 공세나 강압적 조치에 대한 집단적 대응 기제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 역내 패권경쟁과 진영싸움을 조장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4] 김 교수는 동 정상회의에 대해, "최대 승자는 미국이고, 일본도 상당한 이익을 챙겼으나, 한국은 얻은 것은 없고, 큰 손해를 입은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제도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일본은 한국을 대중 경쟁의 "최전선에서 방패막이"로 만들었고,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적대관계에 서는 부담만 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평소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창하는 평화재단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준동맹 체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5] 이를 위해 한미 정부는 정전체제와 유엔사의 틀을 활용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결과 한국은 대중 "포위망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중국을 정면에서 상대"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6]

---

4) 김준형,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성"(영남일보, 김준형의 외교광장, 2023.8.29.).

5) 평화재단 논평 제311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2023.8.23.

6) "주목되고 있는 것이 유엔군사령부일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의 합의에도 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로 동북아 지역에서 NATO와 같은 다자안보 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유엔사는 아시아판 NATO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이에 따라 유엔사 해체 논의가 나옴으로써 유엔사의 불안한 미래를 시사하고 있었다. 정전체제 감시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유엔사는 정전체제 해체와 함께 존속의 의미를 잃게 된다. 미국과 일본이 볼 때, 한·미·일 준동맹이 지속가능한 중국 견제 체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정전체제가 지속되어야 했다." 평화재단 논평 제311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2023.8.23.

나. 한국민의 전략적 고민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중 경쟁은 비교적 최근 현상이지만, 지난 수년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했다.[7] 아래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우리 국민의 미중 경쟁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살펴본다. 사실 특정 외교 사안에 대해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적 국익과 국가 목표, 가치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8],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객관성이 없는 개인 또는 진영적 의견이 되고 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최근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선호를 제시함으로써 3자 협력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대신하고자 한다.

2021년 통일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 국가는 누구인가" 질문에 대해, 중국 72%, 일본 21%, 미국 6%, 러시아 1% 순으로 답변했다.[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1년 여론조사에서 "북한을 포함하여 가장 큰 안보위협 국가"를 질문했을 때, 중국 46%, 북한 38%, 일본 11%, 미국 4%, 러시아 1% 순으로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은 중국을 가장 주목해야 하는 안보위협 국가로 지목했는데, 심지어 전통적인 주적(主敵)인 북한보다

---

7) 이상신 편, 『KINU 통일의식 조사 2021 요약 보고서-미중 갈등의 인식(2021년 10월 조사)』; 김양규, "중간국 한국의 여론 지형 변화: 부정적 대중국 인식 확대 요인과 정책적 함의"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2022.12.2.), "외교정책과 여론" 세션 발제문; 동아시아연구원(EAI), 겐론NPO,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1.9.28.

8) 전봉근, 제2부 한국 외교를 위한 전략적 사고,『한반도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박영사, 2023.

9) 이상신 편, 『KINU 통일의식 조사 2021 요약 보고서-미중 갈등의 인식(2021년 10월 조사)』.

중국을 더 큰 안보위협으로 지목한 것이 특이하다.

2022년 EAI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인상”을 묻는 말에서, 좋지 않은 인상 70%, 좋은 인상 12% 순으로 응답했다.[10] “중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 질문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 90%, 신뢰할 만하다 8% 순으로 응답했다.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주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위협이다 75%, 기회이다 19% 순으로 답변하여, 위협인식이 월등히 높았다. 2019~22년 사이에 위협인식은 70%에서 75%로, 기회 인식은 23%에서 19%에서 각각 변화하여, 위협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의 외교전략”을 묻는 질문에서, 미중 균형외교(53%), 미국과 동맹 강화(31%), 중국과 동맹 강화(4%), 자주 외교(12%) 순으로 답변했다. 여기서 ‘미중 균형외교’에 대한 선호가 2016년부터 50~60% 범위에서 등락하면서 아직 국민의 다수 의견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자주 외교’ 선택은 2016년 29%에서 20121년 12%로 하락했는데, 그 감소분만큼 ‘미국과 동맹 강화’가 증가했다.

EAI와 일본 겐론NPO의 공동 여론조사(2021)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질문에 대해, 우리 국민은 해야 한다 64%, 어느 쪽도 아니다 26%, 부정적이다 8% 순으로 응답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지지는 2020년에 비해, 일 년 만에 11% 증가했고, 중립과 반대는 각각 3%, 8% 감소했다. 여기서 국민의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 증가로 인해,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대폭 감소했을 뿐 아니라, 다수가 지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데 일본 국민은 ‘어느 쪽도 아니다’가 52%로서 다수 의견이며, 2020년에

---

10) 김양규, “중간국 한국의 여론 지형 변화: 부정적 대중국 인식 확대 요인과 정책적 함의”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022.12.2.), “외교정책과 여론” 세션 발제문.

비해 2021년에 1% 증가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는 2020년 39%에서 2021년 36%로 오히려 줄었다.

이 수치를 보면, 한일 국민 간 상호인식은 비대칭적이다. 최근 한국민이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에 호의적으로 변한 데 비해, 일본 국민은 여전히 신중하고, 유보적이다. "한일 양국의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국민은 한일 대립을 어떻게든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해야 46%, 적어도 정치적 대립은 피해야 29%, 상대국의 마음이 변치 않으면 무시와 거리두기로 대응해야 16%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일본 국민은 적어도 정치적 대립은 피해야 32%, 잘 모르겠다 24%, 어떻게든 미래지향적으로 대립 극복해야 23% 순으로 응답했다. 이런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유보적, 중립적, 무심한 태도는 일본의 한일관계 개선, 3국 안보협력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드러난다.

종합하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동북아 신지정학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략적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부상한 중국에 대한 비호감과 안보위협 인식이 급증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을 더욱 좋아하고 의존하게 되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다수가 선호하게 되었다. 동시에 미중 간 외교안보적, 경제통상적 선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택을 미루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랫동안 갈등하면서 살아온 대륙 세력인 중국은 가깝고, 영토적 욕심이 낮은 해양 세력인 미국은 멀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 미국을 안보 후원자로 선택한 것은 지전략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한미동맹은 한미가 서로 필요로 하고 호혜적인 소위 '자연동맹'이다. 동시에 중국을 불신하고 싫어하지만, 너무 강대하고 가까이 있으므로 적대시할 수는 없다.

근래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을 볼 때, 한국이 이런 헤징 외교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한국의 대미 의존도가 커질수록 미국은 한국에게 더욱 강한 반중 연대를 요구한다. 중국은 반대로 현재

한중 교역 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한국에게 친중적이거나, 최소한 균형외교를 요구한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면서,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계속 커졌다. 마침내 윤석열 정부는 종래의 헤징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집중하는 선명한 외교전략을 선택했다. 과연 이 선택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동에 대응하는데 계속 유효할지 미리 알기 어렵다. 앞서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평가에서 보듯이, 한국의 신외교전략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3.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변수와 동학

가. 미국 변수: 현실주의·자유주의의 상수론 vs. 빅터 차 '유사동맹' 모델의 변수론

한미일 안보협력의 성사와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설명은 미국이 3국 협력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지도국이자 해양세력의 최강국으로서 한국 및 일본과 각각 비대칭적인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안보 후견국이 되었다. 사실 미국은 냉전기부터 한미일 안보협력을 일관되게 요구했고, 마침내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단독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3국 협력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밝힌 데서, 이런 미국의 평소 의도를 알 수 있다.[11)]

냉전기 미국은 유럽 전선에서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 유럽국

을 포함하는 집단방위체제인 나토를 구축하고(1949), 동아시아에서도 이를 모방한 '동아시아판 나토'를 모색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반드시 나토식 집단동맹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냉전 초기에 한국, 필리핀 등 일부 반공 국가가 범태평양 집단방위조약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역내 강성 반공국가가 촉발할 전쟁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거부했다. 대신 미국은 친미 국가와 양자 동맹을 체결하여 소위 '바퀴살 동맹체제(hub-and-spoke system)'를 구축하는 데 만족했다. 다만 미국을 동시에 후견 동맹국으로 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준동맹 관계가 역사 갈등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냉전기에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일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실주의자들은 대륙의 거대하고 팽창적인 공산 세력을 밸런싱(balancing) 하려면 거대 해양세력인 미국과 동맹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자는 한일 및 한미일의 연대가 필연적인 이유를 공통된 반공주의, 자유주의에서 찾았다.

그런데 현실은 이들의 예측과 달랐다. 미국은 냉전 초기부터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원했지만, 안보 후견국으로서 막강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을 정착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예외적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성사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강력한 한일관계 개선 요구와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경협자금 필요에 따라 성사된 1965년의 한일 수교 시기, 70년대 후반 월남의 패망(1975)과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1978~1980)로 인한 '동맹 방기' 우려 시기, 80년대 초 세계적인 신냉전 추세 속에서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의 반공·보수 정치연대, 그리고 한국의 대일 '안보경협자금' 요구와 일본의 지원 동의(1983),

---

11) 중앙일보, "바이든 "尹·기시다 덕분에 짐 덜었다"…한·미·일 정상 결속 과시," 2023.11.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8137#home.

탈냉전기 들어 한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의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와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가동(1999~2003), 그리고 최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사례에서 보듯이 간헐적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발생했을 뿐이었다. 미국의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요구가 상수였지만, 또 다른 상수인 한일 간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방해했다.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발생하자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 한일 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발생하는가"를 두고서 학문적 논쟁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빅터 차의 '유사동맹(quasi-alliance)' 모델이 있다.[12] 글렌 스나이더의 동맹 방기와 연루 개념을 활용한 이 모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후견 동맹국인 미국이 역내 안보 개입을 축소할 때 '동맹 방기'이 두려워 서로 안보협력을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미국이 지역 개입을 강화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제공한 안전보장에 안주하면서 상호 협력할 동기를 잃게 되고, 다시 한일 갈등이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이 모델은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생 여부(종속변수)를 설명하면서, 독립변수로서 한미 및 일미 간 '동맹 게임(alliance game)'에 주목했다.

이 글은 유사동맹 모델의 설명력 여부를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적 토론은 생략한다. 다만 이 모델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처럼 미중 경쟁을 위한 동북아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한일은 상호 안보협력을 추진할 동기를 잃어야 한다. 그런데 현 상황은 이 모델의 예측과 반대된다. 유사동맹 모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일 갈등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막상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의 역내 개입이 더욱 강해질 때, 한일 관계가 더

---

12) Victor Chan,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Columbia University, 2000.

욱 밀접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이 모델의 설명력이 의문시된다.

또한 '유사동맹' 모델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재등장하여 지역 안보 개입을 축소하고 동맹을 방기하면, 한일 협력은 촉진된다고 예측한다. 그런데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재등장하여 1기와 같이 동맹을 방기하려고 해도, 미중 경쟁 속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경쟁과 미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곳곳에서 지역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미국이 중·러와 경쟁에서 승리하고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접근을 지속하려면 동맹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 미국은 국력이 약화함에 따라 '역내 균형자' 전략을 실행할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 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직 '역외 균형자' 전략을 수행할 역량은 갖고 있다. 이것도 지역 개입을 지속하고, 동맹과 보조를 맞출 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지역 개입, 동맹 전략,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며, 다만 한일 협력의 조건이 충족될 때 한미일 안보협력도 가동되게 될 것이다. 한일 협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나. 한국과 일본 변수: 한일의 국내 정치 및 상호 안보 게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여부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설명은 한국의 반일 감정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발생하고, 따라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역사적, 심리적 접근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임진왜란, 강제합병으로 대표되는 오랜 한일 갈등의 역사와 이로 인한 불신과 적대감이 한일 협력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강한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반외세적 정체성, 특히 한일 상호 간 무시와 불신이 한일 협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한·미·일의 군사안보 전문가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한일 갈등에 대해 자신들의 객관적인 안보 국익과 동북아 세력균형 정세를 무시한 비합리적, 감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력균형이론과 현대 지정학의 지침에 따라, 대륙 공산 세력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합리적,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반일 감정을 앞세우는 한국을 더욱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다.[13] 사실 한국은 한일관계에서 피해자였기 때문에 가해국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도 한국이 일본의 거대한 경제력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의존적, 위계적으로 될 것을 우려하여, 신중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하지만 한미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한일 양자관계에서 나타나는 독자적인 정치안보 논리를 무시한 채, 공산 세력과 대결만 염두에 두고 한국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역사적, 심리적 접근은 한일 갈등을 설명하는데 유효하지만, 왜 종종 한일 협력이 발생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접근은 한일 협력이 발생하면, 이를 한일 갈등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한일 협력이 수시로 반복되자, 일부 정치학자들은 국내정치적 접근을 대안적 설명으로 제시했다.[14] 국내정치적 접근은 한일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한일의 정치세력이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치세력 간 연대가 구축될 경우, 한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내 정치 설명 틀은 한일 협력의 순간을 설명하는데 유효해 보인

---

13) Cha, 1999.

14) 김호섭,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일본연구논총, 2009, vol. no.29, pp. 59-83; 우승지, “냉전 시기 한국-일본 협력의 퍼즐 : 불개입 가설 대 개입-연합정치가설” 2003,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 pp. 129-149.

다. 하지만 이 설명 틀은 랜덤하게 발생하는 국내 정치 현상에만 집중하여, 외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구조와 추세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설명 틀은 한·일이 안보협력 여부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비대칭적 동맹관계를 체결한 결과 자율성을 제약받게 되지만, 동 설명 틀은 이런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한일 간에는 상호 경쟁하는 '안보 게임'이 작동하는데, 미국 중심 설명 틀은 이를 무시했다. 한국이 국력이 월등히 큰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도 전통적으로 한국이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했으며, 지금도 그런 의구심은 남아있다. 지금도 일본은 한국이 중국 또는 북한에 경사 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때로는 반일을 위한 남북연대를 우려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통일 한국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두 개의 한국 정책과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한국의 통일을 견제하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경계하는 만큼 남북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경계한다. 미일 동맹과 유엔사 체제로 인해 원치 않은 전쟁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때로는 남북관계에 개입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체제를 이용하기도 했다. TCOG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사례는 역사적 접근 또는 국내정치적 접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일 상호관계에서 작동하는 국제정치적 동학과 안보 게임 현상을 보여준다.

이 설명 틀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반중적, 반북적, 군사안보 중시의 정치적, 외교적 이념을 공유할 때,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촉진된다. 이에 더해, 한일의 집권 세력이 각각 이념과 이익에 따라, 역사적 적대감 및 상호 안보게임 등의 갈등 요인을 제쳐두고 한일 협력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성사된다. 보수 정부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이전 문재인 진보 정부는 미중 경쟁에 대한 균

형적 접근, 남북 관계개선 및 남북대화 중시, 군사안보보다는 평화정착 중시, 경쟁적 한일관계 등 시각을 갖고 있어,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매우 어려웠다. 향후 중국의 국력 증가에 따른 위압감이 증가하고, 한국인의 대중 불호감도도 증가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에서 기시다 행정부보다 우파적인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한일 간 안보게임이 되살아나서 한미일 협력의 가능성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다. 북·중·러 변수: 스티븐 월트 '위협 균형' 이론에 따른 위협인식의 일치 여부

동맹이 성립하려면 군사협력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통의 안보위협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절체절명의 위급한 안보위협이 없다면, 전쟁 연루의 위험과 자율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을 결성할 이유가 없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문서가 있는 엄밀한 의미의 동맹은 아니다. 하지만 양국이 정치적으로 안보협력을 선언하고, 필요시 공동 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유엔사 체제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이라는 후견 동맹국을 공유하고 있어 광의의 동맹에 해당한다.[15] 이런 안보협력 관계는 '준동맹'에 해당된다.

---

15)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는 동맹을 "2개 이상의 국가 간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약속(a formal or informal commitment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or more states)"으로 정의했는데, 현 한일 안보협력 관계는 이 정의에 해당한다.

동맹 결성의 핵심 요인이 안보위협의 공유라면,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촉진과 단절을 설명하는 안보위협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종래 현실주의 이론은 북·중·러 공산 세력의 총합적 안보위협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일 협력이 발생하지 않자, 이를 주로 한국의 감정적, 비합리적 대응 탓이라고 돌렸다. 여기서는 이런 단순한 일차원적 설명에서 벗어나,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서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의 일치 여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만약 한일의 안보위협 인식이 불일치하면 한일 안보협력 관계의 동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가 전통적인 현실주의의 '세력균형' 이론을 대체하여 제시한 '위협 균형(balance of threat)' 이론이 유용하다.[16] 그의 '위협 균형'에 기반한 동맹이론에 따르면, 국가들은 상대국의 총합적 국력,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군사 역량, 인지되는 공격 의도 등 4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계산한 '안보위협 인식'에 따라 동맹(안보협력)을 추진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안보위협국(북, 중, 러)과의 거리, 안보위협국의 총합 국력, 공격적 군사 능력, 공격 의도 등을 감안하여 위협 수준을 계산하고 자신의 안전보장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에 따르면 대륙의 안보위협국에 대해, 한일 또는 한미일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의문의 의지가 없다. 하지만 실제 한국과 일본은 '복수' 안보위협국(북, 중, 러)에 대해, 안보위협을 같이 인식하지 않았고, 따라서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냉전기 유럽의 경우, 소련이라는 매우 위험한 '단일' 안보위협국이

16)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있었다. 따라서 서유럽국가들은 역사적 적대감과 현재적인 안보 게임에 따른 갈등을 묻어두고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도 일부 유럽국은 안보위협국과 거리, 역사적 경험, 위협인식 수준에 따라, 대응을 달리했다. 예를 들면, 소련과 거리와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핀란드는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여(1948) 소위 '핀란드화' 정책을 추진했고, 스웨덴은 중립을 선언했으며, 노르웨이는 나토에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다(1949). 탈냉전기 들어서도 유럽국들은 미중 경쟁, 미러 경쟁에 대해서 제각각 인식하는 안보위협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물론 위협국과의 거리(중간에 장애물 유무), 역사적 경험, 국가정체성 등이 그런 차별성의 원인을 제공했다.

냉전기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복수 안보위협 세력을 직면했는데, 이들에 대한 양국의 안보위협 인식이 크게 달랐다. 한·일이 각각 인식하는 안보위협 인식은 안보위협국과 국력의 차이, 거리(지리적 장애요인- 일본의 경우, 대륙과 사이에 있는 바다와 한국이 안보 방파제의 역할을 했다),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큰 차이가 있었다. 냉전기 한국은 북한과 적대관계에 집중했고, 중국과 소련과 같은 거대 안보위협은 무시하고 관계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경직된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냉전기 일본은 남북을 같은 안보위협 요인으로 보아 등거리외교를 추진했고, 중·소와 대치하면서도 항상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은 3개 공산국가와 냉전 종료까지 일관되게 적대관계를 유지했지만, 일본은 상당 기간 남북 등거리외교를 추진했고, 중국과는 1972년 수교했으며, 소련과도 항상 대화를 유지했었다. 심지어 일본은 남북 협력이나 남북통일을 주요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며, 남북 등거리외교를 통해 남북을 동시에 견제하려고 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60년대 중반의 한일 수교 시기에 한국과 일

본 모두 동아시아 공산 세력의 강력한 공세에 직면하여 안보위협이 높아졌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무장 도발로 인해 안보위협 인식이 높아졌으며,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 성공으로 안보위협 인식이 높아져 한일 간 위협인식이 일치했다. 그 결과,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성사되었다. 한편, 70년대 초 데탕트 시기에는 한일 간 안보위협의 비대칭성이 높았다. 북한이 무장 도발을 재개하면서 한국은 높은 안보위협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안보위협에 대응책으로 중일 수교와 남북 등거리 외교를 추진했다. 이때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의 큰 차이는 양국 갈등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유럽에서 막강한 단일 안보위협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토와 같은 단일 집단동맹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던 전통적인 세력균형 이론은 동북아에서 설명력과 예측력이 떨어진다.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설명할 때는 한일 간 안보위협국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의 차이 여부(적대국과의 적대 게임), 그리고 한일 간 존재하는 세력경쟁 여부(한일 간 준동맹 게임)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공산 세력과 일관되게 강한 적대관계를 유지했지만, 일본은 냉전기 내내 유연하게 공산국과 관계를 지속하며 안보위협을 관리하고 완화했다. 이렇게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이 불일치하면, 양자 간 안보협력 가능성은 감소한다. 심지어 70년대에 일본의 대북 대화정책과 남북 등거리 정책은 한일 간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 지정학적 갈등이 심각한 경우, 후견 동맹국을 공유하더라도 공통된 안보위협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안보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성이 증가하면 양국의 안보협력 가능성도 증가한다.

상기 설명 틀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원활한 이행도 향후

한일의 안보위협 인식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2020년대 들어 발생한 남북관계 악화, 북한 핵무장 증대, 중국의 외교 강공책, 한중 및 중일 관계 악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 군사협력, 북·중·러 연대 등으로 인해, 모처럼 한국과 일본은 안보위협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아마 한중관계의 경직, 남북관계의 악화, 북핵위협 급증 등이 없었더라면, 캠프 데이비드 3자 회의도 성사되기 어렵고, 성사되어도 3자 안보협력이 실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안보, 한미동맹,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보수 정부의 등장도 한일, 한미일 협력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 되었다.

상기 설명 틀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까. 역내 미중 패권경쟁의 지속과 악화,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남북 군사적 대치의 악화, 중일 경쟁의 악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일 간 대북, 대중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성이 지속되고, 그 결과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정치 변수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북한정책과 일본 정책은 국내 집권 세력의 변동에 따라 극단적으로 강경과 유화를 오가는 경향을 보였다. 만약 한국에서 진보세력이 재등장하면, 북한과 중국에서 오는 안보위협 요인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이들과 대화 확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일관계는 역사적인 갈등 요인에 떠밀려 다시 갈등 관계로 변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고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는 데 대해 보통국가화와 재무장으로 대응하는데 집중해왔다. 따라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관계 개선의 선의를 보였지만, 한국의 과거사 해결 요구에 별 호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한국의 국력이 계속 신장하자, 일본은 한국을 점차 역내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했다. 일본이 2019년 7월에 단행한 한국에 대한 첨단물자 수출규제는 일종의 한국 길들이기로 해석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내부의 정치변동과 양국 간 안보 게임(미국의 안보 피후견국 간 준동맹 게임)은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불안정 요소로 남아있다.

4. 결론: 한국의 선택

오늘의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해,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2019)에서 미중이 국제질서 재건축을 위해 경쟁하는 "문명사적 변환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선택이 100년간 한국의 국운을 좌우할 것이라며, 국제정세와 한국 외교의 엄중성을 경고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국이 주변국과 갈등하고 강대국 사이에 끼여 선택을 압박받는 것은 어제오늘만이 아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소국들은 언제나 강대국들로부터 줄서기를 강요받았으며, 생존을 위한 선택을 고민해야만 했다. 그런 생존의 위협과 선택의 고민이 일상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국가, 끼인 국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17]

마찬가지로 고대, 중세, 근대 한국도 동북아에서 강대국의 흥망성쇠로 세력경쟁과 세력전이가 발생할 때마다 줄서기를 강요받았다. 그리고 지역 패권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끌려들어 전쟁의 참화를 입었다. 한국은 중국 대륙에서 2천 년간 벌어진 중원의 농경 세력과 북방 초원의 유목 세력 간 패권전쟁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청일, 러일, 미소, 미중 등 대륙 세력 대 해양세력 간 지정학적 경쟁에도 수시로 끌리어 들어, 선택을 고민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의 양

17) 전봉근, 『한반도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박영사, 2023.

강대국을 앞뒷면에서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근대 이후 그런 지정학적 특징은 두드러졌다. 이는 오늘 해양세력인 미국이 대륙세력인 중국과 경쟁하는 미중 경쟁의 전조가 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새로운 한반도 지정학에 대해 정면과 배후에 적을 맞이하는 '복배수적(腹背受敵)' 또는 사면에서 적을 상대해야 하는 '사면수적(四面受敵)'으로 인식했다고 한다.[18]

오늘 한국은 미중의 상충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국내에서 미국을 포기하고,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경쟁하거나, 또는 한미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병행하자는 2개 입장이 경합 중이다. 사실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동맹은 냉전 초기에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신생 한국에게 안보와 경제를 보장함으로써 오늘 한국이 세계적인 중견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든 최고의 외교안보 자산이자 성공 요인이었다. 오늘도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대체 불가능한 외교안보, 경제통상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결코 손상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한미동맹 없이 한국이 홀로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상상하면 그 가치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세력균형이론과 현대 지정학의 지침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최선이자 유일한 '자연 동맹'이다. 오늘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아시아에서 '중국 천하질서'가 재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역내에 최강 해양세력인 미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러시아에 저항할 수 있는 미국이 없었다면, 이 지역의

---

18)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2018)』 17쪽.

중소국들은 이미 대륙의 세력권에 포섭되었을 것이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는 대개 한미동맹론의 입장에서 한국이 더 늦기 전에 중국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하지만 중국이 적대시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가까운 신흥 초강대국이며, 북한의 배후국이자 준 동맹국이고,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이런 지정학적·지경학적 관계로 인해 중국은 한국에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경제통상적·외교안보적 위험을 가할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생존의 위협을 가한다면, 그때 한국은 미국과 전적으로 연대하며 생존을 도모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앞으로도 중국이 한국을 미국으로 완전히 밀어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초래할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중국을 공공연히 겨냥하거나 과도한 군사협력으로 중국의 보복을 자청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제1세션: 한·미·일_토론 【미국】 ❶

토론문 한미일 협력 구조 변화의 작용과 반작용

마상윤(가톨릭대 교수)

❍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 올해 상반기의 중요 외교 이벤트

1. 한일 간 강제징용 문제의 급속 '해결'
2. 한미 정상회의: 핵 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on Group) 신설에 합의하는 등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 도모
3. 이어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개최

〈주요 합의 내용〉

가. 3국 협력 제도화

나.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일방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다. 북핵 핵·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 대응

❍ 한미일 협력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

○ 미국은 냉전의 초창기부터 동북아 지역통합, 특히 한일관계 개선

통하여 한미일 3각 협력 구조화를 희망해 왔음.

○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군사적 postur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인·태 지역 내 전력의 분산 배치 추진
- 중국의 무력에 의한 양안 통일 시도 가능성에 대한 경계 →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 아울러 미 국방부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사이버를 포함한 여러 전력 수단의 통합은 물론이고, 동맹국 전력의 통합적 운용도 의미.
- 한미일 간 통합적 전력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
-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의 역할 강조

○ 경제 안보, 첨단과학기술, 사이버 공간,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도 지대한 관심
-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

○ 이상과 같이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최우선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시급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협 인식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
- 특히 한국의 경우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인

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 핵 개발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

- 미국은 한국에 의한 핵 비확산 방지 규범 파기 가능성에 대응하면서 확장억제 제공 신뢰성 강화 조치에 합의하게 되었음

❍ 한미일 협력의 동인은 무엇인가?

○ Victor Cha 교수의 이론의 적실성?

- Alignment Despite Antagonism(적대적 제휴)에서 미국의 동아시아로부터의 disengagement가 한일협력을 오히려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
- Cha 교수의 이론에 따른다면, 동맹을 경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직 당시에 한일협력이 훨씬 강화되었어야 할 것. 그러나 잘 알다시피 당시에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음.
-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충격이 남아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한일협력으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약 2~3년의 시간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함.

○ 중국을 위협으로 바라보는 한미일의 공통된 인식?

-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국을 위협 세력으로 인식해 왔음.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함. 동 전략은 일본 아베 내각의 아이디어에서 비롯했음.
-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대북정책 관련 중국의 협력을 구할 필요 때문에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음.

- 하지만 중국의 소위 '사드 보복' 이후 한국에서도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는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한미일 간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기 시작함. 이를 전봉근 교수님 발표문(10쪽)에서는 "모처럼 한국과 일본은 안보위협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지적.
-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한 여론의 높아진 위협 인식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난해 말에 발표하였고, 올해 초반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고 설명 가능.

○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미국과 일본 간 중국 위협 인식에 있어서 미묘한 '온도 차'가 존재함.
-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경계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되도록 유지하고 싶어 함.
- 미국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decoupling을 추진하는 듯했으나, 올해 5월 이후 일본과 서유럽 국가의 제안에 따라 de-risking으로 자세 전환했고, 이를 G7 공동의 입장으로 발표.
- 윤석열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나 봉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원칙을 강조함.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의 자세로 중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

고 있음.

- 따라서 대중국 위협 인식의 수렴만으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최근의 한미일 협력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두 가지 추가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1. 윤석열 정부의 매우 높은 북한 핵 위협 인식
   -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 신뢰성 있는 미국의 억지력 특히 확장억제 제공을 확약받고자 했음
   - 이를 위한 대미협상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 개발 옵션 거론

2.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조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강조
   - 한미일 협력, 그리고 이를 위한 한일협력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억제력 제공의 전제 조건이 되었음
   -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 대일 인식은 미국의 전략 요인에 비하면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보수정권은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매우 강경하게 비판적이기도 했음. 가까운 예로,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는 2015. 12월 위안부 합의 발표 이전까지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음.

❍ 향후 한미일 협력의 약화할 조건은 무엇인가?

○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한미일 협력이 다시 약화할 조건도 추론 가능.

1. 세 나라의 대중국 인식 변화
   - 한미일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에 다시 차이가 벌어진다면 3국 협력이 약화하겠지만, 중국의 행동에 극적 변화가 있기 전에는 기대 난망.
   - 적어도 시진핑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변화는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듯.

2. 미국의 전략 변화
   - 만약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제1차 집권기에서와 같은 동맹 경시의 경향이 다시 강하게 표출될 수 있음.
   - 이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크게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
   - 이 경우, 한미일 협력의 유인도 크게 약화할 수 있음.

3. 한국 정부의 대북 위협 인식 변화
   - 윤석열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 그러나 만약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완화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지배적 정치세력의 대북 위협 인식이 약화한다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유인도 약해질 것임./끝/

제1세션: 한·미·일_토론 【일본】 ❷

토론문 역사적 전환기의 한미일 안보협력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1.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대전환과 일본의 방위력 증강의 함의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안보 관련 전략 3 문서를 각의에서 결정한 뒤의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후의 안전보장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것”이지만, “일본국 헌법,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의 견지, 평화국가로서 일본이 걸어온 길은 앞으로도 불변”하다고 지적했지만, 다양한 사태를 상정하고 자위대의 능력으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현재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반격능력 보유,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의 대응,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남서지역에서의 방위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1)]

얼핏 보면 일본 특유의 모순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2월의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대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가 일본을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

1)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1216kaiken.html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다. 2013년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협력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안보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022년 문서에서는 러시아를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2013년 문서에서는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규정했던 중국에 대해 2022년 문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면서 일본의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우호국과 연계하여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2013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은 9년 뒤인 2022년 문서에서는 일본 안보에 대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an even more grave and imminent threat)'이라고 경계심이 강화되었다.[2)]

이러한 환경에서 일본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능동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강력한 외교를 전개하고, 자신의 국가를 스스로 지키는 방위력을 보유하는 것은 그러한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2022년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지적했다. 특히, 유사시와 평시, 군사와 비군사의 경계가 모호하고 안보 대상이 경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립과 협력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국제관계 전반을 부감하면서 외교력·방위력·경제력·기술력·정보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하는 고차원의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 안보에 관한 최상위 정책문서인 국가안보전략이 외교, 방위, 경제안보, 기술, 사이버, 해양, 우주, 정보, 정부개발원조(ODA), 에너지 등 일본 안보와 관련한 분야의 정책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3)]

---

2) 조진구,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박영준 외,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포커스 2023-01(2023년 1월), 15-36쪽.

3)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令和4年 12月16日,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이번 전략 3 문서 개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방위비를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5년 후인 2027년까지 동맹국 미국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대처하고 "대체로 10년 후까지 보다 조기에 원거리에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침공을 저지·배제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위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에서는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7가지 능력이 열거되었다. 즉, 일본에 대한 침공 자체를 억제하고 원거리에서 침공 전력을 저지·배제하기 위한 능력(①스탠드오프 방위능력, ②통합방공미사일 방위능력), 억제 실패 시 영역 횡단적 우위를 바탕으로 비대칭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③무인자산 방위능력, ④영역 횡단적 작전 능력, ⑤지휘통제 정보 관련 기능), 신속하고 끈기 있게 활동을 계속해 상대방이 침공 의도를 단념시키는 능력(⑥기동전개능력·국민 보호, ⑦지속성·강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제하는 데서 가장 중시되었던 것이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활용한 반격능력의 보유다.[4)]

미일동맹에서 미국이 창(공격), 일본이 방패(방어) 역할을 한다는 역할 분담이 정착해왔는데,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앞으로 일본이 창의 역할도 하겠다는 것을 공언(公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격능력 보유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국가방위전략은 일본의 반격능력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포함해 일미 공동으로 그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협력 태세를 구축"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공격하는 함정이나 상륙부대를 위협권 밖에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육해공 자위대가 스탠드오프 방

4) "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令和4年 12月16日,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위능력을 반격능력으로 활용할 것을 규정했지만, 자위대가 스탠드오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었다.

2023년 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소위 2+2)에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서의 일본의 반격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일미 간의 협력을 심화시킬 것을 결정"했다.[5] 이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사정거리 2,000~3,000km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할 때까지 과도적 조치로서 미국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판매함으로써 일본이 반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일본이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자체를 억제할 수 있을지, 혹은 억제가 실패해 일본에 대해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추가적인 무력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6]

개정된 일본 국가안보전략은 2013년 첫 제정 시에 제시했던 국제협조주의에 바탕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이념으로 계승하면서 일본 방위의 1차적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안보상의 능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미일동맹을 안보정책의 기축으로 하면서 타국과의 공존공영, 동지국과의 연계, 다국간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것을 안보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국가방위전략에서는 지역 특성과 각국 사정을 고려하면서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다각적, 다층적 방위협력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어떤 나라가 동지국인가 하는 점이다. 조약상 방위 의무가 있는 일본의 동맹국은 미국뿐이다. 일본의 언론은 영국과 호주 나아가 최

---

5) https://www.mofa.go.jp/mofaj/na/fa/page4_005748.html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6) 『令和5年版 日本の防衛-防衛白書-』, 防衛省, p.213.

근에는 필리핀에 대해 '준동맹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엄격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23년 6월 6일 기자회견에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동지국에 대해 "반드시 정의가 확립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어떤 외교 과제에서 목적을 같이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과 목적을 같이하는가 어떤가 하는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가 6월 1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이 한국, 호주, 필리핀을 동지국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도 같은 성격 규정을 하는지 물었지만, "어떤 국가가 동지국에 해당하는지는 각각의 외교 과제에서 일본과 목적을 같이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일괄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명언을 회피했다.[7)]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동맹국·동지국 간의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구축·확대하여 억제력을 강화해 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일미한, 일미호 등의 틀을 활용하면서 호주, 인도, 한국, 유럽제국, 동남아시아연합(ASEAN) 제국, 캐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과의 안보상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협력에 관해 구체적으로 동지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관여 강화 촉진, 공동훈련,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일본에서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ACSA), 원활화협정(RAA) 체결,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과 이전, 능력구축지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억제조치(FDO)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월 3일 필리핀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마크코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방문 시의 입국 절차나 무기·탄약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활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

7) https://www.kantei.go.jp/jp/tyoukanpress/202306/6_a.html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합의했다. 필리핀과 일본은 2022년 4월 외교·국방 각료급의 2+2를 처음 개최했으며, 일본이 필리핀과 원활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준동맹국'이라 불리는 호주, 영국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된다. 정상회담에서는 동지국 군대에 무상으로 방위장비품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올해 처음 창설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S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리핀에 6억 엔의 장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호주와 2022년 1월 처음으로 원활화협정을 체결하고 2023년 8월 13일 발효되었는데, 8월 23일 항공자위대와의 공동훈련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호주 공군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35-A를 호주 공군기지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순환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호주에 순환 배치되면 호주군에 대한 공격에 대해 자위대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여 반격하는 것을 상정한 훈련도 실시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과 호주나 필리핀과의 안보협력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함께 대항하려는 의도에서 실현한 것이다. 미일 양국과 호주, 필리핀을 포함한 3국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역내에서 미군의 우위가 위협받는 상황은 일본 안보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것에 미일 양국의 이익이 일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5년간 43조 엔의 방위비 수준을 확보하여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신속하게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방위력 강화가 일본의 안보 확보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올해 3월 5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에 상당)에서 리커창 총리(당

시)는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1조 5,537억 위안을 배정했다고 보고했다. 2023년 일본의 방위예산 약 6조 8천억 엔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4일 뒤인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예산편성 방침을 제시하는 예산교서를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전년도보다 3.3% 증가한 8,864억 달러였다. 5조 엔 전후였던 일본의 방위비는 올해 처음으로 6조 엔을 넘었는데, 8월 31일 일본 방위성이 공표한 2024년도 방위예산은 7조 7,385억 엔으로 올해보다 9천억 엔이 많아 역시 역대 최고다.

일본은 적의 영역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능력의 보유를 통해 일본의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중국을 자극하여 오히려 일본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려서 실전 배치되는 것은 빨라야 2026년인데, 미국은 사정거리 1,5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2025년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0월 4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최신형 '블록-5' 400발 가운데 200발을 구형 '블록-4'로 변경해 2025년부터 일본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역할의 확대가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할 우려조차 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우크라이나가 동아시아의 내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 부채가 약 1,255조 엔(2022년 6월 말 현재)이나 되는 재정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국방비를 두 배로 늘려 침략전쟁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와 달리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두 배로 늘려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본과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적인 안보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대내외적으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의 한일 안보협력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의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십이 시작하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미한의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개화(開花)시키는 것은 필연이며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면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연계를 강화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동맹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공동 목표로 제시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끌어올릴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회담이었다.[8]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향후 한미일 협력에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는 "힘에 의한 또한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직접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8) 한국 대통령실이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비공식 번역문.

예상대로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의 국영 신화사 통신은 8월 20일 발표한 영문 논평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중국 위협론을 확산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안보협력을 가장하여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세력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미국이 한일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역내 안보 리스크를 높여 궁극적으로 한일의 안전을 훼손하고 한국과 일본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9] 8월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관계의 발전은 필연이며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자주성'을 요구했다고 한다.[10]

6월 8일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다양한 수준에서 중국과의 교류·소통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국제질서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국이 해양안보 전략을 방어 위주에서 '공세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연대하여 미국과 서방에 맞서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이후 중국은 한국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Quad나 AUKUS 같은 대중국 포위망 형성으로 인식하는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미일에 경도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세 가지 문건 가운데 필자는 두 단락으로 구성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

9) "Xinhua Commentary: Trilateral meeting at Camp David stokes embers of Cold War," https://english.news.cn/northamerica/20230820/62939b4dabd542c796df9990c8fc53ed/c.html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10) 『朝日新聞』, 2023년 9월 1일 석간.

첫 단락에서 한미일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했다. 여기에서 언급한 신속한 협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세 나라 정부의 발표문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도 있다(아래 표 참조).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Commitment to Consult Amo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the leaders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mmit our governments to consult trilaterally with each other, in an expeditious manner, to coordinate our responses to 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 affecting our collective interests and security. Through these consultations, we intend to share information, align our messaging, and coordinate response actions.
我々、日米韓三か国の首脳は、我々の共通の利益及び安全保障に影響を及ぼす地域の挑戦、挑発及び脅威に対する三か国の対応を連携させるため、三か国の政府が相互に迅速な形で協議することにコミットする。こうした協議を通じ、我々は、情報共有を行い、対外的なメッセージングを整合させ、対応を連携させる意図を有する。

2022년 한미일 3국은 국가안보전략의 최상위문서라 할 수 있는 정책문서를 결정했는데, 전략은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2월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과제를 해결하는데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특히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이외에 "지역의 발전과 인프라, 중요한 기술과 공급망 문제,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3자 간의 지역적 전략의 조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11]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는데,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및 일본 방문 의미에 대해서 "사활적인 두 안보 동맹의 재확인과 강화, 활발한 경제 파트너십 심화, 두 민주주의 동지국가와 함께 21세기의 규범 형성"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12]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한 한일관계의 개선을 장려했으며, 한일 양국은 그런 미국의 기대에 부응했다. 2022년 11월 프놈펜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A4 4장 분량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2023년 3월과 5월 한일 정상의 상호방문이 실현되고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협의'를 통해 3국이 취할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 affecting our collective

---

11)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ebruary 2022, p.17.

12)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May 18, 2022.

interests and security)"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지만, 미일과 한국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한국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표현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고 대항하는 것이 양국 공통의 이익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한미일 간의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share information, align our messaging, and coordinate response actions)"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공동의'[13]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은 3국의 정상만이 아니라 외교 및 국방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정례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는데, 11월 12일 캠프데이비드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렸다. 지금까지는 샹그릴라 아시아 안보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제55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 참석하는 오스틴 장관의 방한에 맞춰 열리기는 했으나 별도 형식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14]

9월에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

13) 영어로는 'collective', 일본어로는 '공통의'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 한미일 국방장관 이외에 미일이 제3국을 포함한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호주가 유일하다. 2007년 3월 13일 일본은 미국 이외의 국가로는 처음으로 호주와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Japan-Australia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Cooperation)을 발표했으며, 이를 계기로 6월 6일 일본과 호주는 각료급의 2+2를 처음 개최했다. 이에 앞선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미일과 호주 3개국 국방장관회의가 처음 열렸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연내에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2024년부터 실시하는 '다년간'의 한미일 공동훈련 계획을 연내에 확정하여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15]

10월 하순 한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치는 한반도 남쪽 공역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되었는데,[16] 일본 방위성 보도자료는 이 훈련에 언급하면서 한미일 장관들이 "한미일 3국의 공동 훈련이 착실하게 진전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여 3개국의 강고한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17]

우리 국방부의 보도자료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일은 '지역적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범위가 더 넓다. 11월 13일 제55차 SCM에서 승인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서도 "위협으로부터의 방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2019년 11월 15일 채택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공동성명 제14항에서 한미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미국 측 발표 공동성명에는 "다년간의 3자

---

15) 국방부 보도자료,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개최(2023.11.12.)."

16) 11월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실시되었다.

17) https://www.mod.go.jp/j/approach/anpo/2023/1112a_usa_kor-j.html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군사훈련 계획의 제도화 현황(the status of institutionalizing a multi-year trilateral military exercise pla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한미일 3자 공동 군사훈련을 일회성 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18]

연내에 확정될 한미일의 3자 훈련의 목적이나 대상, 지리적 범위 등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협력 양상을 띨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은 '동지국'과의 안보협력에 관해 공동훈련,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일본에서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ACSA), 원활화협정(RAA) 체결,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과 이전, 능력구축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 들어와 독일,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의 전투기가 일본에 와서 공동으로 훈련하기도 하고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필리핀에서 공동 훈련을 하기도 했지만,[19] 한일 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공동훈련을 재개하고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이외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특히, 지금까지 한일은 한반도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있지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훈련하거나 이명박 정권 시절 추진했다가 좌절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연내에 확정 예정인 다년간의 한미일 3자 훈련 계획도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며, 중동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와 일본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나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훈련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20]

---

18) 55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Nov. 13, 2023),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3586522/55th-security-consultative-meeting-joint-communique/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19) 『朝日新聞』, 2023년 10월 30일.

20) 일본 방위성 보도자료. 국방부 보도자료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AP4) 정상이 초청받았으며, 2023년 7월에는 NATO와 AP4 사이에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체결되었다. 미국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한국과 일본이 과학기술·대테러, 사이버안보, 신흥기술 등 새로운 안보 과제에 관한 협력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문제도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와 한일 군사동맹, 그리고 역사문제

2022년 7월 22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확정한 국정과제 105번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지적했다. 한일 및 한미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여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상, 장관(외교/국방), 안보실장 등의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함으로써 세 나라의 안보협력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년간의 3국 공동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세 나라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을 협력의 '제도화'라고 해도 조약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동맹과는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캠프데이비드에서 발표한 '공약'은 한미 및

고 언급했다.

미일 동맹상의 약속(commitments)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법적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향후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축적해감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의 형태로 한일 및 한미일 군사동맹을 상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5일 공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은 매우 흥미롭다.[21)]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을 맺어야 하는가를 처음으로 물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동맹에 동의('어느 정도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한 것)하는 비율이 52.4%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47.7%보다 높았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동맹에 동의('어느 정도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한 것)하는 비율은 55.5%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44.6%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지지 정당에 따라 한일 군사동맹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대북, 대중 군사동맹에 모두 찬성하는 사람은 62.2%로 민주당 지지자의 34.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23.8%와 민주당 지지자의 47.5%가 대북, 대중 군사동맹에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 보고서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요약보고서는 통일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284&category=51&nav_code=mai1674786536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태도(단위: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대북 한일군사동맹	10.8	36.9	46.1	6.3
대중 한일군사동맹	9.8	34.8	48.3	7.2

지지 정당별 대북 및 대중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태도(단위: %)

	국민의 힘	민주당	지지 정당 없음
대북 및 대중 한일동맹 모두 반대	23.8	47.5	40.7
대북 및 대중 한일동맹 중 하나만 찬성	14.1	18.3	20.1
대북 및 대중 한일동맹 모두 찬성	62.2	34.3	39.3

출처:『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p.70.

한편, 지난 8월 말에서 9월 말에 걸쳐 한국과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이 한 조사에 의하면,[22] 북한과 중국을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한국에서 89.7%와 57.9%, 일본에서는 80.0%와 68.0%였으며, 한일 양국 국민 10명 가운데 5~6명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 국민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동맹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한국과 일본에서 약 10%로 차이가 없었다. 그밖에 정보공유와 정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41.5%와 19.6%, 일본에서 47.5%와 13.9%로 나타났으며, 북한 핵문제에 대응이라도 한일

22)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에 조사가 이뤄졌다(한국: 8.25.-9.13., 일본: 9.2.-9.24.).

간 안보협력에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20.5%, 3.6%에 그쳤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지역(단위: %)

	한국 국민	일본 국민
2023년	북한 89.7	북한 80.0
	중국 57.9	중국 68.0
	일본 28.9	러시아 60.4
	러시아 19.9	미국 10.8
	미국 6.2	한국 5.8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단위: %)

		한국 국민	일본 국민
2023년	매우 그렇다	8.9	14.6
	일정 부분 그렇다	51.7	35.3
	어느 쪽도 아니다	27.0	46.7
	대체로 부정적이다	9.8	1.8
	매우 부정적이다	2.8	1.0

북한에 대한 한일 안보협력의 방향성(단위: %)

	한국	일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도 안보협력에 반대	20.5	3.6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일 정보공유는 필요	41.5	47.5
정보공유만이 아니라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신설해야	19.6	13.9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의 동맹 검토 필요	10.9	10.0
모름	7.4	24.8

출처: [EAI 여론브리핑] 2023년 EAI-겐론NPO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일본과 한일관계(2023.10.12.)[23]

그렇지만, 한일관계에서는 여전히 역사문제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EAI-겐론NPO 공동조사에서는 한국인의 29.6%(일본인의 19.3%)가 역사문제의 해결 없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한국인의 36.3%와 일본인의 32.1%가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 역사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응답한 점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양국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지지 여부를 왜 물었는지 알 수 없지만, 통일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한일 간의 군사협력 문제는 양국 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한일관계가 최고로 좋았던 1998년 10월 8일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부속서에서는 '한·일 방위교류' 항목에서 "양국은 국방 방위당국간 방위교류의 확대 강화를 도모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물론 지난 25년 사이에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

23)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129&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에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안보협력의 틀을 구상해야 하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일 3국의 '공동의 안보 목표(shared security goals)'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적 충돌 등이 미중러 관계에 미칠 영향에 더해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한 양안 관계,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한미일 대북중러의 대립 구도 등 국제적인 요인과 함께 한국의 총선거와 미국의 대통령선거, 기시다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율 등 한미일 세 나라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무엇보다 한미일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4]

24) 11월 18일과 19일 실시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5%로 10월 조사보다 4%p 줄어 2012년 12월 말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한 이후 가장 낮았다. 10월 조사에서 60%였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65%로 한 달 사이에 5%p 늘어나 최고를 기록했다. 『朝日新聞』, 2023년 11월 21일.

제1세션: 한·미·일_토론【한국】❸

토론문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봉근 교수님의 발표문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역사적 통찰과 국내 정치적 논란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의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반작용까지를 검토한 포괄적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다. 최근 한미일 협력의 배경과 영향을 다룬 어떠한 발표문보다도 분석적 측면이 돋보이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표문 후반부에서 한미일 각국이 향후 3자 협력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를 검토한 대목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논거를 제공한다.

본 토론문은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 발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한미일 3국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현실에 좀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3자협력이 처해있는 현실적 취약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쟁점과 과제를 추가로 도출해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나토 정상회담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복원'을 선언한 이후, 11월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구상의 향후 진로에는 적지 않은 난제들도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현단계에서 짚어볼 수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취약점과 한계를 구성한다.

첫째,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3국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위협인식의 영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한국은 보편적 가치 공유 3국협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을 최우선시하며 한미 핵협의 그룹(NCG) 제도화 수준 증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보, 탐지, 추적 능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범세계적인 관여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대중 전략경쟁을 수행하는데 핵심적 자산 및 소다자 동맹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대북·대중 위협인식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계기로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대만 유사시 군사적 기여를 강조하며 미일동맹 내에서 역할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둘째, 2024년 대통령 선거 등 미국 국내정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한·대일 동맹정책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이 전격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는 9월 중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나가면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시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대외정책에서의 동맹 경시와 일방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2] 특히 헤리티지 재단은 공화당 집권시 차기 정부의 국정

---

1) 성기영,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INSS 전략보고』(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pp. 4-10.

2) Daniel Drezner, “Bracing for Trump 2.0: His possilbe Return Inspires Fear

과제를 제안한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국방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기도 했다[3]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플랫폼인 '어젠다47'을 통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국방예산과 군수자원을 고갈시켰다"고 비난하며 유럽으로부터 이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던 전례에 비추어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5년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관계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시 주일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4~5배 인상하도록 요구받은 바 있어 '트럼프 변수'는 내년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일본의 의도와는 인식차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헌법상 영토주권을 바탕으로 북한의 침공시 일본의 대북 공격은 한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일본은 북한에 대한 반격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 본토가 위협받을 경우 방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일본

---

in America's Allies-and Hope in Its Rivals," Foreign Affairs, September 5, 2023,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bracing-trump-possible-return-allies-rivals (accessed October 24, 2023).

3) Paul Dans et al.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p. 94. https://www.project2025.org/policy/.

의 자체 방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공격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과 대북 교전시 한미 양국에만 공격 기능을 맡길 경우 대두될 수 있는 '일본 무임승차론'이 대북 직접 공격의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4)]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공약' 문서에서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다짐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한일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인식차를 반영했을 것이다. 어디까지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는 각국의 우선적 판단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처럼 명백한 3국 공통의 위협도 존재하지만, 동중국해 분쟁과 같은 사안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하여 공통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을 넘어 공동의 대응에 나서는 데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3국의 메시지는 '동조화(align)'하고 대응조치는 '조율(coordinate)' 한다는 표현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정보 공유와 메시지 및 공동의 대응조치에 대한 협의 의무를 약속(pledge)할 것'이라는 미국 측 고위관계자의 사전브리핑과 달리 한국 측 관계자가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결과였을 것이다.[5)]

행위자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한미일 협력구조를 형성하는 한미, 한일, 미일의 3개 양자관계(dyad) 중에서 한일관계와 미일관계의 진전 속도와 추이에 따라 3자 협력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장에 의한 위협이 상수로 존재하

---

4)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전문가가 보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한반도포커스 23-0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 91-93.

5) 신지혜, "원칙·정신·약속…캠프 데이비드의 세 문건, 어떤 내용 담겼나" KBS뉴스 2023년 8월 19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2121.

고 중국발 공급망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한미관계를 등한시하는 대외전략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공통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동맹 방기에 대한 공통의 우려가 존재할 때 양자관계가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미국의 막후 역할에 기반한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시도되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여파로 고전하는 동안 푸에블로호 피랍과 청와대 습격사건 등 북한 위협 고조에 따라 한일 간에는 방위협력이 모색되기도 했다.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방기(abandonment) 우려 속에서 한국은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화, 일본은 대한(對韓) 경협 방식으로 양자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도 했다.[6]

그러나 발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pp. 4-5)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측의 인식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에 대해 역사적 관점을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설 경우 양자관계는 잠재적 갈등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7]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존재하고, 일본 내에서는 혐한 정서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경계심리마저 고조되고 있다.[8] 한국에서 강경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이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는 상황도 염두에 둘

---

6) Cha, Victor D.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7)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는 G7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와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과거사 해법과 관련한 일본 측의 불신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대연, “결국 불발된 한미, 한일정상회담… 언제쯤 가능할까” 경향신문 2021년 11월 3일.

8) 양갑용, “중일 혐한 정서 기저요인과 확산 기제 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p.42-52.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 개선이 다시 지체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협력을 견인(outside-in)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국내 정치변수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보수정부가 집권했을 때 한미일 협력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에서 우경화 성향이 더욱 강한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미일 협력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딜레마가 해소될 때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한편, 미일동맹은 바이든-기시다 체제에서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1월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방위력 증강을 위한 일본의 '과감한(bold)'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commend)했다. 일본이 적 기지 반격능력과 향후 5년 내 방위비 2배 증가를 명시한 안보전략 문서를 각의에서 통과시킨 뒤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력 증강을 위한 일본의 '리더십'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지지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일동맹 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군사적 기여 확대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에 맞춰 가고시마현의 무인도 마게시마(馬毛島)에서 군사기지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군사기지가 완공되면 요코스카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에서 발진한 폭격기가 이착륙훈련을 위해 태평양 이오시마(硫黃島)까지 1,200km를 날아가는 대신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마게시마에서 훈련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마게시마를 미국의 '불침항모'에 비유하기도 한다.

동시에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12포병연대는 첨단 감시정찰 능력은 물론 대함 미사일 능력까지 갖춘 신속기동군 형태로 재편된다. 중국군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는 오키나와 주변에서 군사충돌이 생기면 미군 증원 전력이 올 때까지 인민해방군의 침공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는 해병연안연대가 탄생하는 것이다. 마게시마의 함재기 훈련장과 해병연안연대 창설 모두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미일동맹의 진전은 한반도 유사시 기존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 이용 주일미군 활동 지원이라는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이동하는 미 함대를 호위하거나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는가 하면 기뢰 제거 작전 등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향후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이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미국 내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유념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 대중국 군사임무에 투입되는 상황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9]

미일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한미동맹과의 비동조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비동조화 현상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외전략 뿐만 아니라 대아시아 전략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맹간 연계, 소다자 네트워크 구성과 같은 목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역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0]

---

9) 유신모, "한미일 군사협력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경향신문 2022년 7월 15일자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150300055.

10) 조은일, "한일 안보전략의 비동조화와 한미일 협력의 재구축," 『한반도 평화에 대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동조화를 통해 한미일 3각협력이 재구성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시나리오별로 한반도 안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어야할 부분은 한미일 협력의 영역 확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서에서 한미일 협력의 확대를 '10대 행동계획'의 하나로 공식화했다. 전략서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의 모든 도전들이'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간의 지속적 협력 △지역 개발과 인프라, 핵심기술, 공급망, 여성 리더십 제고 등에서 협력 등을 적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공조 등 가치와 규범적 측면 △청정에너지 및 바이오기술, 제약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STEM 등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측면 △국가 우주 전략 대화 추진 등 우주안보 측면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 빈곤 퇴치 활동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3자협력을 선언했다.

캠프데이비드 합의 이후 3국은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한미일 3국 간 최초로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열고 격년 정기개최에도 합의했다. 올해 들어 한일 양국 간 국장급 과학기술 분야 협의 채널이 10년 만에 열린 것도 평가할 만하다.

반면, 한미 양국 정상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왔던 가치 기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들은 상호 간의 '신념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외교정책의 선택 범위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당국 국민들 사이의 단결을 촉진하는

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 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152-155.

일체감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11] 내년 3월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민주주의 포럼'과 같은 형태의 트랙2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3국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저변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1) 로이든 젠슨, 『외교정책의 이해』 (서울: 평민사, 1993) pp.99-102.

제2세션

북·중·러

발표

북·중·러 밀착의 현재, 동인, 그리고 전망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토론

[중국]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러시아] 박노벽(전 주러시아 대사)

[북한] 이철(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제2세션: 북·중·러_발표

러-우 전쟁이후 북·중·러 관계의 현재, 동인, 그리고 전망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1. 서론

한반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냉전장화 되고 있다. 북한은 아마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현 미중 전략경쟁 국면과 세계 질서의 변화를 '신냉전'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는 정권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역시 현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의 가치 대결이 시대의 조류로 인식하는 듯하다. 흥미롭게도 주변 주요 강대국들은 현 국면을 신냉전의 상황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냉전 시대의 도래로 현 국제정세의 변화를 해석하는 남북한 정권은 전통적인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해석과 진영 대립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갈등의 강화, 군비경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은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가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사회주의 진영이었던 북·중·러의 결합을 당연시 전제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한국내 매체의 다양한 논쟁이나 학술 토론에서조차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대립 구도를 전제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나 적어도 역사적으로 북·중·러 삼각동맹이나 연대의 순간은 냉전시대조차도 지극히 짧았다.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는 중소 간의 분열이 확대되고 있었고, 1970년대가 되면 중국은 미국의 준 군사동맹이 되어 소련을 견제하는 정책이 중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 중국군 현대화와 개혁개방정책 추진은 각기 미국과 일본이 가장 강력한 후견국이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중·소로부터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보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이것은 북한이 '자강'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과 '핵무장'을 추진했던 외교안보적인 배경이 되었다.

2018년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방 3각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남방 3각과 대립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자강'이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핵·미사일 전략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고, 중국에 대한 경제·정치적 예속을 크게 경계하였다. 미중 대립구도가 심화될수록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것이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개연성이 컸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경계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러 전쟁의 결과로 북·중·러 밀착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론이나 현실적으로나 위의 전제는 다 부합되지 않는다. 물론 북·중·러 3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는 있지만, 이 3자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는 연대의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동상이몽의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북·러는 군사적인 부문까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러 전쟁으로 크게 압

박을 받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싶은 이해도 강하겠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동류나 동급의 국가로 생각지 않는다. 북·중·러 연대는 대단히 특수한 조건하에서나 실현 가능할 것이다.

북·중·러 3각 관계는 미·중·러 3각관계의 틀과 더불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중·러 3각관계로 북·중·러 3각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다 상위 구조의 전략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는 전략적 3각관계를 세 행위자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속성을 지닌 '3자 동거모델,' 한 행위자가 다른 두 행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두 행위자는 적대관계인 '낭만적 3각관계,' 두 행위자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한 행위자는 두 행위자와 모두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안정적 결혼모델'의 유형으로 분류했다.[1] 디트머는 이 가운데에서도 낭만적 3각관계에서 유연성을 결여한 다른 행위자들과 제휴할 역량, 즉 균형자와 같은 중추적 위치를 갖는 국가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설파했다.[2] 미·중·러 전략적 3각관계의 변화는 북·중·러 3각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두 삼각관계의 접선에서 그 함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1)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2) 전략 3각관계 관련 설명은 신욱희,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p. 9-14.

2. 중국 시진핑의 대외정책과 대러, 대북 관계

가. 시진핑 3기의 대외정책

왕이 외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2023년 중국의 6대 외교임무를 발표하였다: ① 국가원수(元首) 외교 지원, ② 전방위 외교 확대, ③ 글로벌 거버넌스의 최대공약수 수렴, ④ 중국의 발전과 대외 개방 지원, ⑤ 국익 수호를 위한 방어선 강화, ⑥ 국제 소통 능력 강화.[3] 이 6대 외교과제는 시진핑 3기를 여는 중국의 외교정책의 지침이란 측면에서 중요하다. 중국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넘어, 이제 세계 질서를 변화하는 데 주도적인 위상을 갖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중국 외교는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변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의 주요 조언자인 푸잉 전 전인대 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저서에서 미국과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는 변혁하고, UN 체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는 존중하면서 개혁하고, 새로운 안보이슈를 다루는 global 질서는 미국 등과도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4]

둘째, 중국의 국가 정체성의 변화이다.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이 강대국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global south의 일원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global south와 global north를 연결하는 국제 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셋째,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대에 대응하여 보다 전방위적으로 우

---

3) 王毅, "谈2023年中国特色大国外交六大任": https://baijiahao.baidu.com/s?id=1753409263433947600&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2-7).

4) 傅莹, 『看世界』, 北京: 中信出版集团, 2018, pp. 11-18.

방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화민족의 부상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6대 외교임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최대공약수 수렴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엿보이듯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담론 즉, 발전 구상(2021), 전략구상(2022), 문명구상(2022) 등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가능한 많은 국가들의 협력과 공감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상과 같은 시진핑 3기 외교는 기존 중국 외교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과학적 유물론자”라 할 수 있는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는 상부구조에 대한 무모한 도전보다는 “일대일로 구상”과 같은 하부구조의 변화 추구를 통해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진핑은 미국과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초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해와 맞아떨어졌다. 그 결과 미중은 최근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나. 중-러 관계

중·러관계에 대한 평가는 러시아와 중국 내에서 다양하다.[5] 거의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른

혼인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6] 보다 구체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애증이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의 관계는 당연히 많은 갈등과 우려를 배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서구화된 러시아의 극동진출 정책은 청나라와 충돌하였고 중국은 1689년 네르친스크 국경조약을 수용해야 했다. 사회주의 혁명시기 중국 공산당 초기 소련 리더쉽의 안티테제가 마오쩌둥의 부상과 혁명 성공이었다. 사회주의 건설시기 중국은 1950년대 초중반 일시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통해 국가건설을 추진했지만, 중소분쟁은 점차 악화되었고 세계사회주의 혁명의 리더쉽을 놓고 갈등하였다. 급기야 중국은 1970년대 사회주의 연대를 포기하고, 미국과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연대를 모색한 것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단일 패권질서가 수립되면서부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공세적 정치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을 수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질서하에서 꾸준히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추구하였고, 러시아는 그 협력 대상이 되었다. 물론 러시아 역시 중국과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였다.[7]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중국 외교의 거의 최고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중·러 전략적 합작동반자(战略协作伙伴) 관계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국경분쟁 관리와 반테러주의라는 명목으로 상해 협력기구를 공동 운영하면서 매년 공동 군사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장기간의 영토분쟁을 해결하였다. 2011년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

---

5) 이에 대해서는 傅莹, 『看世界』, pp. 175-184; David Shambugh (김지용, 서윤정 역),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문화사, 2021), pp. 329-351.

6) 傅莹, 『看世界』, p. 175.

7) David Shambugh (김지용, 서윤정 역), pp. 329-351.

고, 양국은 세대를 넘는 전면적인 전략합작동반자(全面战略协作伙伴)관계로 격상하였다. 2014년에는 중·러 간 장기간 천연가스 공급협정도 체결하였다. 시진핑 체제에서 중·러는 최근까지 각기 9차례와 11차례의 상대국 정상방문이 있었다.[8] 특히 2018년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은 중국과 러시아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킨 가장 중요한 구조적 동인이다. 자유주의적 미국 패권질서에 대한 반대라는 분명한 공동의 목표가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중·러 전략적 협력은 2022년 2월 푸틴의 중국 방문시 체결한 "양국 우호는 끝이 없고, 협력은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중·러 공동성명에서 절정을 이뤘다.[9] 양국은 중국의 새로운 국제질서관을 대폭 수용한 UN 중시 원칙을 지지하였고, 냉전체제의 이념적 대립을 담은 이분법적 세계관과 동맹체제의 형성을 비판하였다. 2022년 중·러 간의 무역 총액은 1990억불을 넘어섰고, 전년 대비 29.3%의 증가율을 보였다. 아직 최종 통계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2023년 중·러 간 무역 증가율은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10]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발발은 중·러관계에 있어 대단히 의미있는 리트머스 테스트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 직전 2월에 채택된 중·러 정상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중-러 동맹과 서방의 전면적인 대립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기존에 자신이 주장하던 원칙들을 견지하면서도, 대단히 신중하고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중·러

---

8)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sbgx_679114/.

9) 그 러시아측 전문은 http://en.kremlin.ru/supplement/5770; 그리고 중국측 전문은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1207_679122/202202/t20220204_10638953.shtml.

10) 习近平(2023.3.20.),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1209_679120/202303/t20230320_11044353.shtml.

관계의 중추국 지위는 이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 일반 예상과 달리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자제하였다. 대신 러시아의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하고 교역은 더 활성화시켰다. 외교적으로는 UN 원칙을 지지할 것, 정치적 해결의 강조, 나토 확장에 따른 러시아의 우려 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여 중재를 시도하였다. 러시아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만족하였을 리는 없다. 하지만 미국에 대항하고, 국내정치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중·러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더 중요했다. 러시아는 결국 2023년 3월 중·러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우-러 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정치적 해결 주장, UN 헌장을 존중한다는 합의를 발표하였다.[11] 중국은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발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게다가 서방의 대러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의 대러시아 경제지원은 자제함으로써 서방과의 관계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다.[12]

중·러간 관계는 역대 최고라 자평한다. 그러나 중·러관계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시험대에 들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다. 중-북 관계

냉전시기 이래 북한에게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방이다. 중국

---

11) 이의 전문은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1207_679122/202303/t20230322_11046188.shtml.

1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장덕준, 「우쿠라이나 전쟁과 러중 관계의 전개」, 『중소연구』 제47권 제2호(2023), pp. 157-200.

에게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이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불편한 동거의 역사”라고 규정되듯이 굴곡이 많다.[13] 현재 북·중 간 공식 규정은 “전통적 우호친선” 관계이다. 일각에서는 “전통적”이란 개념을 동맹에 준하는 특수관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중국 외교에서 이 개념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 부가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김일성은 1950년대 중반 연안파 제거를 계기로 불거진 북·중 간의 갈등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얼마나 실재하는 지를 잘 체득하였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실상 한·미 동맹에 대한 자체 결속과 생존전략이란 측면도 존재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오는 방기와 내정간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약소국의 전략을 채택한 것이기도 하였다.[14]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이후 약소국의 이익과 제3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에 연루되어 얼마나 막대한 손상을 입었는지를 잘 체감하였다.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현상유지 정책이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수준의 국력에서 다시는 한반도 문제에 연루되어 자신들이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하에 두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중 동맹을 강조하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핵심이익으로 전이될 수 있는 중대이익 정도의 지역이자 긴밀한 관리 대상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이 과거 1970년

---

13) 최명해, 『중국·북한의 동맹관계』, (서울: 오름, 2009). 동시에 북중 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이상만, 이상숙, 문대근, 『북·중관계: 1945-2020』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참조.

14) 이를 잘 정리한 글이 최명해(2009).

대 중반 현상변경을 도모하고자 할 때,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었다.

냉전시기 외양적으로는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북·중 관계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채택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임무가 되면서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시각도 점차로 바뀌었다. 1992년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중 수교를 단행한 것은 북한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외교는 기존의 실리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15]

이러한 북·중 관계가 더더욱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한 것은 중국이 2000년대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이데올로기를 넘어 세계적인 보편성을 보다 추구하였고 강대국 정체성이 강화되었다.[16] 후진타오 초기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검토를 통해 북·중 관계를 더 이상 혈연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17] 이러한 입장은 미중 전략경쟁 이전 시진핑 시기까지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한·중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중국 외교에서 중시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까지 발전하였다. 무역량에 있어서도 중국은 2014년부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규모도 2022년 3,000억불 수준을 초과하였다.

중국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북한의 행태 역시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

15) 북한의 실리외교는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문화사, 2013); 국립통일연구원, 『2021 북한이해』 (서울: 국립통일연구원, 2022), pp. 80-81.

16) 이상만, 이상숙, 문대근, 『북·중관계: 1945-2020』, p. 107.

17) 이에 대한 설명은 김흥규, 「새로운 북·중관계의 시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정덕구/추수롱 편, 『기로에 선 북·중관계』 (서울: 중앙북스, 2013), pp. 37-48. 중국 내부의 대북 전략사고의 분화에 대해서는 김흥규, 과숙한,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국방정책연구』 2(4), 통권 114호, 2016.

는 별도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였다.[18] 즉,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후진타오의 방미를 앞두고, 2013년 북한의 정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2017년 9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은 시진핑 2기체제 출범을 앞두고 단행하였다.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29일 정북 성명을 통해 핵무력완성을 선언하였다.[19]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는 북·중이 서로 불편해 하면서도, 상호 전략적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3월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북간 일시적인 '썸타기'는 종결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은 신냉전이라 할 정도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는 전통적인 지정학의 국제정치가 복구되었다. 해양 패권세력에 대응하는 대륙 세력의 도전으로 이 구도가 이해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대 권위주의의 대결 구도로 더욱 선명하게 해석되기도 했다. 이 구도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중국 역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북·중·러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시진핑 시기에도 중국 외교는 북한과의 우호 정책을 한반도 비핵화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20] 이러한 입장은 미중 전략경쟁 시기 보다 분명해졌다.

미중 전략경쟁 시기 북·중 간 실제 상황은 상기의 가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북한의 전략적 선택은 자강력의 강화였다.[21] 북한은 중

---

18) 이에 대해 잘 설명한 글은 김흥규, 「중국의 역할과 한·중관계」, 윤영관 편, 『한반도 2022』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9), pp. 205-235.

19) 국립통일연구원, p. 23.

20) 이기현, 「시진핑 시기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 가?」, 성균중국연구소 편, 『북·중관계 다이제스트』, (서울: 다산출판사, 2015), p. 12.

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크게 경계하였다. 미중 전략경쟁 시기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좋은 외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보다도 중국의 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자강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자 중국의 지원제의도 뿌리치고, 2022년 말까지도 북·중 국경을 강력히 봉쇄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쟁물자가 크게 부족해 진 러시아와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과 경제 지원이 절실한 북한과의 이해는 서로 맞아 떨어졌다.[22]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물자 지원은 북·러 간 전략적 결합을 더욱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23] 러시아는 지난 9월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10월 푸틴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중·러 간의 대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그러나 중국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대신 북·러 간의 협력 강화를 우려스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중국이 정책우선 순위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과 현상유지에 있다. 북·러 밀착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추가되는 것이었다. 중국측은 이미 2023년 3월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중국이 추진하는 쌍궤도 병행 전략의 합당성에 대해 푸틴으로

---

21)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자주적 원칙을 대외활동의 근간으로 내세웠다. Ibid. p. 94.

22) Julian E. Barnes, “Russia is Buying North Korean Artillery According to U.S. Intelligence,” *New York Times*, September 5, 2022.

23) Gilbert Rozman, “How did the Ukraine War Change Putin’s “Turn to the East”? *Asian Perspective* 47 (2023), pp. 362-364.

24) 필자의 인터뷰. 지난 11월 초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와 북경대 인문교류기지 간에 개최된 한·중정책대화중에 중국 측 인사와의 사담내용 (2023.11.4.).

부터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25] 이러한 내용은 최근 북·러 관계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 정책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순응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가능하다.

북·중은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 상호 우호적인 태도를 강화하면서도, 실제적인 협력은 대단히 제한적인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북미가 급격히 가까워진 2018-2019년 북·중 정상회담은 다섯 차례나 개최되었다. 미중 전략경쟁 시기 북·중 간 정상회담 소식이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는 것은 현 북·중 관계가 서로 불편한 동상이몽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3. 북·중·러 3자 관계 형성의 동인 분석

가. 미중 전략경쟁의 지속

미중 전략경쟁과 윤석열 정부 이전, 북·중·러 전략적 삼각관계의 형성과 협력 여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사안이었다. 북·중·러는 각기 서로 다른 비전과 국제정세 인식,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권을 존중받고자 했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 다른 변수가 끼어들어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북한은 자강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 시점에서 북·중·러가 과연 전략적 3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의 여부 역시 여전히 불명확하다. 제각기 동상이몽을 꿈꾸고

25)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1207_679122/202303/t20230322_11046188.shtml.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 북·중·러 3자 관계의 형성에 주목을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미중 전략경쟁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질서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의 대립이라는 영합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시도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와 이데올로기 중심의 세계 정치관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주주의의 선봉으로서 '글로벌 중축국가 구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한·미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시키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대폭 제고하였다. 미중 전략경쟁시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안티테제는 당연히 북·중·러 연대의 강화다. 미국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다면, 동북아의 안보 정세는 민주주의 진영인 한·미일의 연대와 권위주의 진영인 북·중·러 연대의 첨예한 대립구도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북·중·러 연대가 아직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이러한 연대가 진행된다면 이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미중 전략경쟁이 신냉전의 상황으로 악화되면서, 미중 갈등이 완전히 영합적 게임의 세계로 전환되는 새로운 조건이 창출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중국은 이 북·중·러 연대의 방향을 결정할 중추국 위치에 선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미국이나 중국은 모두 미중 전략경쟁이 군사적 대결이나 이분화된 극단적 대결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4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갈등 확산은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미중 갈등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다. 경제의 침체와 청년 실업율의 급증, 리커창 총리의 급작스런 죽음, 고위 지도자들의 연이은 숙청 등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미중 갈등보다는 시진핑 체제의 안정성이 우선이다.

미국의 탈중국화 압박에 대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의 반발

이 거세지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지난 4월 기존의 대중 정책 방향을 “탈동조화(decoupling)”에서 “위험방지(derisking)”로 전환하였다. 중국과 전면적인 탈동조화나 신냉전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과 충돌의 길로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전략경쟁을 관리하면서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기조이다. 이는 최근 사망한 헨리 키신저이 제시한 상호 공존을 전제로 한 경쟁과 상호 진화의 방식을 수용한 것이라 보여진다.[26]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적어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기존의 ‘전략적 협력,’ ‘신냉전,’ ‘전략적 경쟁’ 정책에서 벗어나 경쟁적 공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7]

나.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북·중·러 3각 관계에서 또 다른 변수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흡사하며, 역대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보다 친미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에게 있어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대일 정책, 중국과의 관계, 대북

---

26) 미중 Co-evolution 주장에 대한 키신저의 인터뷰 내용은 https://news.cgtn.com/news/2023-11-30/Henry-Kissinger-on-co-evolution-of-China-U-S-relations-1p9qmFnElcQ/index.html.

27) 경쟁적 공존이란 개념을 최초로 미중 관계에 정식으로 적용한 인물은 미 해군대학 교수 Andrew Erickson이다. Andrew S. Erickson, “Competitive Coexistence: An American Concept for Managing U.S.-China Relations,” *The National Interest*, 30 January 2019. 최근 Joseph Nye 역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Joseph Nye, “America Should Aim for Competitive Coexistence with China,” *Financial Times*, November 16, 2023;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america-should-aim-competitive-coexistence-china.

정책에 있어 일정정도 자율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미국의 대일, 대중 및 대북 정책의 방향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세계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립의 장이라는 대립적이고 이원적인 국제질서관을 적극 수용하였다. 윤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역사문제와 성노예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일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대일관계 개선에 나섰다.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패권질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러시아와 적대적인 입장에 섰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중국해 자유항행과 국제법적 질서를 강조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언급하여, 중국과의 대립도 서슴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였다. 한반도는 현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한 북한과 신냉전적 정세관를 실제적으로 적극 수용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신냉전 상황으로 진입하였으며, 본격적인 군비경쟁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8]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긴밀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관계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는 그 상대로 전제한 동북아 권위주의 국가들의 반발, 갈등 심화, 마찰을 전제한다. 핵미사일 역량을 완비한 북한은 향후 제약받지 않는 군사적 도발을 수시로 강행할 것이고, 윤 정부는 필연적으로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다. 특히 양안 위기가 고조될수록,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한반도 지역을 미중 진영 간에 군사적 충돌의

28) 이러한 신 냉전적인 세계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23).

확전될 우려도 커진다. 자연재해는 수만에서 수십만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반도 전쟁의 쓰나미는 수백만 혹은 그 이상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윤 정부는 지난 7월 유럽 방문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지원을 약속하였다.[29] 한국의 포탄과 군수물자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였다.[30] 그리고 각종 외교적인 압박, 경제적인 재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로 초빙하여 한국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한국은 북·러 간 긴밀한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급격히 흔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의 최대 도전은 중국에서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을 곤혹스러게 할 수단들을 어느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최근 불거진 요소수 사태 역시 정부는 중국의 일시적인 공급 불안정 문제로 치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사안은 중국의 윤 정부에 대한 압박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이는 윤정부에 희망과는 달리 한·중 관계 개선은 쉽지 않고,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군사, 해양, 외교적인 압박이 윤석열 정부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례없는 참패로 드러난

---

29) KBS,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중…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https://v.daum.net/v/20230715215913692.

30)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리스트는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understanding-russia-s-unfriendly-countries-list.html/; 파이낸스 뉴스 TV, 러시아, 한국 비우호국 지정…진출 기업들은 속탄다.; https://blog.naver.com/fnnews0927/222670142606.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은 실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반대편에 서는 프레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향후 더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악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일 일 것이다. 중·러발 자원 공급 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에다가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더하면 내년 한국 경제는 대단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윤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 정책입장을 고수하고, 미중 갈등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이는 북·중·러 연대를 실현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대외정책의 불안정성

아마 현존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현재로서는 2024년 미국 대선의 결과일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직까지 미국 민주당 내 바이든의 적수가 될만한 인물은 출현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내에서는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와 전 미국 유엔대사였던 리키 헤일리가 트럼프와 경쟁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우위에 있다. 현재 여론 조사 결과로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국 헌법상 4년의 단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의 대외정책은 더욱 광폭의 움직임을 보일 개연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시절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대중 관계를 전폭적으로 '전략적 경쟁'관계로 전환시킨바 있다. 그의 집권 후기에는 중국 정부, 정치체제, 지도자를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공격하는 신냉전의 양상이 펼쳐졌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대표적인 공격수였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중 관계는 다시 '신냉전'의 상황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첨단 과학·

기술 영역에서 “Small Yard, High Fence”로 상징하는 대중국 억제 정책을 추진중이다.[31]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이 다시 선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도 분명하다. 이러한 미국 보호주의나 우선주의는 트럼프 치하에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로 바뀔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과의 갈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통적으로 구소련과 각을 크게 세웠던 미국 공화당의 대외정책은 변화하고 있다. 민주당에 비해 대러시아 적대의식은 현저히 낮다. 트럼프나 공화당의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고 싶어 할 것이다. 이 경우, 중·러 관계는 시험대에 들게 된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미국 편에 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러시아의 대중, 대미 레버리지는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설사 바이든이 재집권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경쟁적 공존’정책이 지속될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역대 최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과 대립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질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발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현재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처럼 북·중·러 전략적 안보연대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공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발 도발은

---

31) Jake Sullivan,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7,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4/27/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renewing-american-economic-leadership-at-the-brookings-institution/.

관리되기보다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4. 북·중·러 관계 전망과 정책 제언

북·중·러 3각 연대의 출현은 당분간 가능성이 낮다. 미국의 위상과 역내 영향력 약화, 다극화 세계의 추진이라는 공통의 이해분모를 지니고 있지만 북·중·러는 여전히 각기 다른 국제정치관, 전략, 정책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러 관계는 현재 안정적 결혼모델에 가깝고, 중국은 여기서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 서 있다. 중국이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공한다면, 중국은 낭만적 3각관계의 중추국과 같은 지위로 부상하는 것이다. 굳이 북·중·러 3각 밀착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2024년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은 중추국의 지위를 획득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중·러 협력이 다소 이완된 상황에서 미중이 갈등하는 '유사 안정적 결혼모델'에 가까울 개연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북·중·러 전략적 밀착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 북한 스스로는 이러한 미·중·러 전략 3각관계의 향배를 결정할 수는 없다.

중국은 이미 냉전시대에서부터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변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관리하려 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로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위상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중 동맹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다. 더구나 북한에 연루되어 중국의 이익을 희생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물론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순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불거진 북·러 간의 밀착은 상호 간의 이해와 필요성이 맞아 떨

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러시아 스스로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북한의 전통적인 러시아에 대한 불신, 중·러 관계를 고려할 때, 현 동북아 안보질서의 게임체인저가 될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편향정책과 가치 외교의 강조는 북·중·러 모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적대적일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중·러를 협력의 장으로 끌어 들일 동인은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그 키를 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중국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구도이다. 이는 러시아도 아마 동의할 것이다.

향후 북·중·러 협력의 구도에 가장 영향을 미칠 변수는 2024년 미국 대선이 될 것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러 및 대중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미·중·러 3각 관계에서 중·러는 협력, 미·러는 대립, 미·중은 제한된 경쟁관계라는 등식이지만, 미 대선의 결과 그 등변관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3각관계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실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동인들이 모여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보다 복잡한 북·중·러 관계가 형성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윤 정부의 가치 외교가 표방하는 남방 3각과 북방 3각의 대결 구도는 현실과 부합하지도 않으며, 실제 한국 외교안보의 공간을 크게 제약한다. 그 결과 윤 정부 외교안보의 핵심 아젠다인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지경쟁이 직면했던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유사한 운명을 맞이할 우려가 크다.

중국은 적어도 한국의 내년 총선까지는 중국에 비우호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우호적인 조치를 계속할 공산이 크다. 러시아발 경제·외교적 압박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와 외교는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을 맞

아할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적 프레인 자체를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읽어내고, 보다 유연한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면서, 당파적 정쟁을 넘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환난의 시기에도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

제2세션: 북·중·러_토론 【중국】 ❶

토론문 북·중·러 밀착의 현재, 동인, 그리고 전망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1. 동북아정세

○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러-중·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 한·미·일과 중·북·러의 대립구도가 가시적으로 형성되는바 이는 정치와 경제영역에서의 연대와 신냉전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임.

> ※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은 동북아 국제사회에 신냉전 국면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세기 미·소 대립으로 인한 제1차 냉전체제의 1순위는 '가치대립', 2순위는 '이익대립'에 기초한 대외협력이었으나, 21세기 미·중 대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제2차 신냉전체제의 1순위는 '이익대립', 2순위는 '가치대립'의 성격이 강하다.

○ 한·미, 한·일, 미·일의 양자관계가 한·미·일 공조의 제도화라는 3자 관계로 변화되면서 남쪽으로 '오커스+2', 북쪽으로 '한·미·일' 공조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되어, 북·중·러 간의 연대도 가시화되고 있음.

○ 북·중·러는 이미 한·미·일 협력을 3각 군사협력이자 '아시아판 나토 결성'으로 규정하고 연대적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북한 역시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보유국 지위 획득 및 유리한 역내 환경 조성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음.

○ 북한이 중·러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 당사자인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30년 동안의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 노력을 포기하는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결과이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오랜 정책검토 끝에 나온 것으로 보임.

○ 중·러 입장에서도 북한을 반미전선 형성에 활용할 수요가 있는 만큼, 북·중·러 3국간의 상호협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2. 북한 상황

○ 북한은 제재와 억지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등 대(對)서방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지 않고 있고, 중·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적 조치를 적극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은 핵·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느라 대내 경제문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중·러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생존 전략기조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은 장기적인 지정학적 흐름에 따라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보장이 가능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

○ 북한의 이러한 방향으로 대미정책을 전환한다면 약 30년동안 핵개발과 연계하여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가전략노선과 대외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한국은 남북관계의 장기경색 국면에 직면하여 대북 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것임.

3. 북·중관계

○ 미중관계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북·중관계는 호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회의에서 나타났듯이 미·중간의 극한 대결은 피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도 변화할 것으로 보임.

○ 북·중관계는 북한의 대중 인식과 전략, 중국 대북 인식과 정책·관계의 변화, 관계 소원·경색에서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북·중관계의 우호적 발전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이 한·미·일 삼각공조에 의한 중국봉쇄를 돌파하며, 중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지정학적 전략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중국은 '쌍궤병행' 해법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할 것임.

○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한반도의 안정(현상유지)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최고도로 유지(완충지대 지속)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미중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요구할 것임.

○ 적어도 북한이 핵보유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순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급격히 하강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레버리지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할 것임.

○ 중국은 언제나 북·중·러 3국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므로, 북한이 바라는 방식의 북·중·러 3자 연대를 중국이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북·중·러 3자 연대 보다는 북·중-북·러-중·러 양자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중국은 북·중·러 군사협력에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경제적 원조와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러 밀착 강화(7월, 9월, 10월)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제고를 통해 對 중국 레버리지 공간을 확대(북한의 차이나 딜레마 극복)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것임.

○ 실례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11/11)를 통해 북·중·러 연대 및 '새로운 북·러 관계' 강조하면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위한 부문별 회담 (11/14)을 개최한 것은 러시아와 군사 및 경제협력에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4. 한·중관계

○ 미·중관계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중관계 개선, 한·러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미래 전망에 매우 중요하므로 북·중·러 어느 한 쪽도 적대시하거나 배타시하면 안 될 것이며, 한국이 한·일, 한·미관계에 계속 올인 할 경우 한국의 대중, 대러, 대북 전략적 유연성 활용 공간은 축소될 것이므로 한국 역시 미·일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수정하는 담대한 전략적 방향 전환이 필요함.

○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고, 북·중·러 3국이 결속하여 한·미·일에 대항하는 구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최악일 것이므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믿는 상황에서 보면 북·중·러 3자 공조보다는 북·중, 북·러와 같이 양자관계를 통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함.

○ 중국은 한·일관계와 한·미관계와 한국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 상황에서 굳이 한국이 미일 일변도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한 한국의 국내정치에 개입할 의사도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어렵고, 설령 방문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 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한·중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국익우선의 원칙론 입장을 유지해야하며, 한국이 조급하게 미·중·러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국익'에 기초한 일관된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 미·중·러와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공존 가능한 국가'로 공동 발전을 추구해야함.

○ 더 나아가 한중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호 존중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한·중간의 고위급 군사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주력해야함. 끝.

제2세션: 북·중·러_토론 【러시아】 ❷

토론문 23년 정세평가 및 24년 전망: 북중러 관계 현황, 동인, 전망

박노벽(전 주러시아 대사)

Ⅰ. 현황

1. 러북 간 군사, 외교, 경제분야 등 다양한 협력 확대 여건조성

(러시아)

1) 러시아는 7월 쇼이구 국방장관을 최초로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시켜, 시급히 필요한 북한포탄 확보와 합동군사훈련가능성협의 등 군사협력 여건 조성

2) 외교협력 도모와 북한, 중국과 3각 연대확대 기대

- 러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안보리 논의시 북한 입장 두둔 지속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 이래 북한의 전폭적인 외교적 지지를 평가하며 지지세력으로 규합하여, 반러 제재에 적극 가담하는 한미일에 대해 대항할 필요
- 푸틴, 8월 동북아에서 미국에 의한 나토와 인태전략 간 연계에 대한 대응을 비판, 북중러 연대를 시도함으로써 동북아와 한반

도에서 러시아의 입지 개선 도모

3) 무역확대, 노동자파견, 북러접경지대 인프라구축 등 협력모색

(북한)

○ 김정은 위원장은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 다극체제로 인식하고 북중러연대 추진이 고립탈피에 유리하다고 판단

○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유엔결의채택 등 논의시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고,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 필요성에 부응

2. 러북정상회담개최(9.13) 계기, 군사, 외교, 경제협력의 확대 실현

가.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극동군사시설 시찰

1) 푸틴 대통령은 9월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북한의 위성개발 지원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답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지원 약속을 공언한 만큼, 북한의 군사첩보위성발사 지원 가능성 예견

2) 다만,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후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함으로써 러측은 서면합의 등 물증 없이 지원

3) 러북정상회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최초 정상회담으로서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선택, 방문한 점은 북한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러시아를 우선시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규정,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해 협력'이라고 주장

나. 군사협력

1) 북한은 포탄 1백만 발 및 로켓포 등 군사장비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컨테이너 이동포착)

-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첩보위성 발사의 성공을 위해 기술적 자문제공 정황

2) 러시아는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시작된 제재의 영향으로 초기 포탄과 각종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나 이후 제재를 우회, 자체 생산력을 증대추진 중

- 러시아의 현재 포탄 생산량은 연 200만발로 전쟁 발발 이전의 두배로 증가.
- 전선에서 월 60만발을 사용 시(하루 2만발) 북한 제공 백만 발은 러군 약 2달분 소요량
- 북한 포탄제공이 소요 부족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해 줄 수 있으나 결정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시

  *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금년 중1달 8~9만 발을 사용(연96만 발)하며 당초 24만 발 1/3 감소(152mm and 155mm)

다. 외교협력

1) 러시아 외교장관 방북(10.18-20), 김정은 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외교연대 강조

-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해 전제 조건 없는 협상 프로세스 구축을 지지한다고 하고 러시아는 북한, 중국과 함께 한미일이 추진하는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에 반대하여 "긴장 완화와 긴장 고조 불용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장 고조에 대한 대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

2) 러시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질서 개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

라. 경제협력

1) 푸틴은 러북 정상회담시 경제 협력분야로서 물류망 연결, 항만 운영, 농업 및 인도적지원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는 점을 언급
   - 정상 회담의 배석자면에서 북한 측의 국방외교인사들과는 달리 러측은 외교, 국방과 경제산업관계 장관들도 배석.

2) 11월 러북 경제·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 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 지질조사와 북한에 필요한 에너지 및 기타 물품 공급 계획논의
   - 러시아 민간항공기의 평양직항로 개설논의
   -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서 건설 분야 전문인력 부족 심화로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등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러측은 2023부터 2025년까지 지역에 예정된 건설 작업량을 고려, 1만 7천3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Ⅱ. 동인과 한계

1. 러시아와 북한 간 공통분모

가. 서방의 제재하에서 반미 외교 연대 형성

1) 러시아는 미국 주도 질서에서 다극질서로의 전환 추구, 북한은 이를 지지

2)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으며 반서방 입장 공유

나. 우크라이나전쟁 지속으로 상호 군사협력 필요 충족

1)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전이 포격과 미사일 사용 등 재래식 소모전으로 진행, 포탄 등 탄약부족을 해소하며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

2)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핵잠수함 등 선진기술 확보 기대

- 북한은 8차당대회시 ICBM 명중도 개선, 핵잠수함개발 등을 중점달성 목표로 지정

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연대형성에 대한 대응, 한반도문제에서의 입지 강화

1) 러측 전문가들은 러·북 정상회담이 최근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강조.

2) 북한은 신냉전구도 강화를 위해 러시아지지 강화

2. 양측 강조점의 차이

가. 양국관계 성격에 대한 인식차이

1) 푸틴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만찬시 북한을 인접국으로서 일반적 우호국관계를 언급

- 김정은 위원장은 포괄적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규정

2)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이래 한반도에서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취해 왔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전시키는 차원에서, 북한을 활용, 실익확보와 영향력 유지에 도모

나.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 보존

- 러시아는 안보리이사국으로서 안보리제재결의를 공개적으로 무시, 위반하기에는 부담을 갖고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제재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구두합의를 통해 대북군사 협력 진행

3. 한러관계의 급격한 악화속에 러측의 한러관계 유지의향 표명

가. 우리정부의 우크라이나지원 확대에 대비하여 대러제재와 비판 강도 고조

- 특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교류에 대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불법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및 규탄

나. 한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쳐로 한러관계 중시 발언

○ 루덴코 외교 차관 방한이 거론되다가,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으로 연기

- 루덴코 차관은 기자회견(9.12)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있다”며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의 무역 파트너로 간주한다”고 언급
- 러시아는 UN 대북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결정적 증거 부족을 강조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차단 압박

1) WP(12.4)는 한국산 포탄의 미국 이전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보도

- 우리정부의 비살상무기에 국한하여 지원한다는 원칙 유지문제

4. 러북 간 군사 협력확대에 대한 중러의 전략적 인식 공유 여부

○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유엔안보리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는 중국도 서방의 제재받는 국가 대열에 동참하게 되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중재적인 역할로 제한할 가능성

5. 미국의 대북정책추진 부재

○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전쟁, 중국과의 경쟁대처에 우선순위

- 북한은 미국이 대화보다는 압박정책을 유지한다고 간주

Ⅲ. 2024년 전망

1. 러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에 따라 러북 간 협력 동인 유지와 역할 분담 고착 여부

○ 북러관계의 밀착은 2024년도에 전쟁 양상에 따라 지속, 변화 가능성

가.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

-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지속을 통해, 군사적 물자 확보와 분업 생산 등 실익을 확보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에 의한 나토와 인태전략 간 연계에 대한 대응 지속
- 북한은 신냉전구도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며 지속 시도 가능
- 러 주도 협력블럭에 북한 합류 유도 가능성
-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미사일 기술을 보완하고 뒤쳐진 공군력 및 해군력의 강화지원을 계속 확보할 경우 한반도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

나. 휴전 또는 종전 협상 개시 압박 대두 시나리오

- 전쟁양상이 미국과 유럽 내 선거 등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기에 우크라이나지원 축소와 지연으로 러시아가 우위에 서면서, 키이우에 휴전 또는 종전협상 압박 발생 가능성
-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탄약사용량이 줄어드는 단계가 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 극동지역이나 점령지역 복구에 필요한 러시아의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 유입 등 러북간 경제협력 지속가능

2. 한러관계에 의한 영향

가. 푸틴 대통령, 12.4 신임 한국대사 신임장 제정시 한러관계 복원 희망 표명

- "안타깝게도 한-러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회복은 한국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상기 발언을 통해 한국이 직접 연루되지 않은 전쟁에서, 상호제재 이후 양국관계가 갑자기 소원해졌고, 최근 러북 간 정상회담 전후 군사 교류확대에 대한 우리의 강한 반발에 따라 어려워져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세지로 전달.

한러 교역규모는 감소추세

- 2021년 279억불 → 2022년 210억불 → 2023년 1~9월간 120억불(수입 70억/수출 50억불)
-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한 한국 위성 아리랑 6호와 CAS500-2호 발사에 관해 러시아와의 계약 해지 협상(10.10)

나. 러북경제 협력의 한계와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 원칙 유지

○ 북한과 경제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

- 북한의 경제운영방식이 러시아와는 달리 시장경제체제 미정착으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제협력은 한계봉착
- 러시아의 식량 및 에너지와 북한의 노동력 대가를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 가능

3. 미러관계변화에 의한 영향

가.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와 같은 고립주의 후보의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거나 당선 시 중국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타협할 가능성
다만, 미 의회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 결의안 채택 등 견제로 급격한 대러 유화책은 어려울 것

나. 북러 간 외교경제교류는 유지 가능성

4. 러시아의 북중러 3각협력시도의 한계

○ 외견상 보이는 중러북 관계는 각자 입장상 차이가 있어 결속의 한계존재

가. 중국은 러북연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서방과의 외교,경제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북한식 신냉전구도형성에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어 일정한 거리를 두는 입장

- 다만, 중국은 러북 간 군사 등 관계긴밀화에 대해 “양국관계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한미일연대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북러관계를 적극적으로 제동하는 등 간섭하거나 행동하기는 어려움

5. 한반도정세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 리스크 해소를 위해 관련국들과 상호이해와 협력유지 문제에 대해 균형감을 갖고 대처할지 여부

- 새해는 지역적으로 도처에서 불안정성과 분쟁 발생의 위험이 계속 가중되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

나. 서방의 제재하에서도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재개 명분과 종용 가능성

- 러시아가 러북 군사교류 자제 등 한반도 안보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러관계 회복을 위한 고위급 대화 외교 고려

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지속가능성에 대비, 억제와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끝/

제2세션: 북·중·러_토론 【북한】 ❸

토론문 러-우 전쟁 장기화, 북중러 연대에 따른 북중러의 입장

이철(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1. 러-우 전쟁을 보는 북한의 시각, 입장

1) 러-우 전쟁의 원인

- 북한은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우 전쟁의 원인이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에 있다며 러시아와 같은 입장에서 러-우 전쟁을 보고 있다. 이로부터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러-우 전쟁의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고[1] 그 배후에 나토가 있다 보고 있다.
- 또한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우익세력이 나토의 사촉을 받아 나토의 세력을 동쪽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에 적극 보조를 맞추었으며 이러한 배경이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단행케 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 나토와 미국의 지원하에 나토 가입을 추진해 옴으로써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가중시켰다고 북한은 보고 있다.

---

1) 우크라이나는 러-우 전쟁 이전부터 러사이와 접견한 지역,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 왔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

-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러-우 전쟁의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북한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정의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지·지원하고 있다.

2) 신냉전과 다극 체계로 재편

- 북한은 러-우 전쟁을 계기로 세계가 신냉전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북중러의 결속을 인정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비판하며 “국제관계 구도가 ‘신랭전’ 구도”로 재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신냉전” 대신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의 전환”을 언급하였다.[2] 결국, 북한은 현 세계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냉전과 다극화는 미국의 일극체계고수와 이를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의 대응, 국익우선주의에 따른 국제질서의 다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핵 보유와 사용 의지

- 러-우 전쟁은 북한으로써 핵 보유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한 계기로 되었다. 러-우 전쟁의 발발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미국이 체결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의 제거/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1994년 ‘부다페스트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양해각서'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러-우 전쟁으로 2015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체결한 '민스크 협정 II'도 휴지장이 되었다.

- "평화"를 약속한 국가 간 합의와 조약들이 무효화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힘에 의한 평화"로 더욱 마음 굳혔을 것이다. 2022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언급하였다.[3)]
- 당 8차 대회 이후 북한은 핵 무력의 "자위적 성격"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2022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정책」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공격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핵 무력 사용의 문을 열어 놓았다.

4) 경제 회생의 기회

- 지난(2023년) 7월 27일 "전승절" 기념 북한 열병식(군사퍼레이드)에 러시아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러시아 국방성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였다. 다음 날 김정은은 쇼이구 장관을 북한의 무기전시관에 직접 안내하고 설명하는 친절을 보이였다. 이후 김정은은 몇 년만에 자강도 군수공장을 찾고 수일(3~4일) 군수 부문 현지 지도를 하였다.
- 이후 미국 등 서방 언론들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뉴스들이 등장하였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8일.

- 북한은 6.25 전쟁 이후 구소련에서 수정주의 대두와 이념논쟁, 중국의 대국주의와 문화대혁명 등으로 국방 분야 지원이 약화되면서 자주국방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자강도 지역은 대표적인 군수공업 지역으로 분류되며 대표, 탱크, 미사일 등의 생산라인들이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외에도 북한 전 지역에 군수공장들이 수많이 설립되어 가동하고 있다.
- 군수생산라인을 정연하게 갖춘 북한에 러시아가 군수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들을 제공하고 필요한 무기 생산을 주문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무기임가공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 일본, 남한, 중국으로부터 의류임가공 주문을 받아 외화를 벌던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임가공을 주문 받는다면 그로부터 얻는 외화수입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고 미국으로부터 무기생산 주문을 받아 다시 회생하였다.

5) 북한 군사기술의 업그레이드

- 지난(2023년) 5월 극초음속미사일 “킨잘”의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푸틴은 “우방들에 우리의 군사기술을 전수하겠다.”고 업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러시아의 원동지역 보스토니치 우주발사장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푸틴은 북한에 위성발사기술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 한편,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한 러시아가 국내 군수공장들을 축소하고 시장상품 생산에 진입하였으나 러-우 전쟁으로 무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미국과 서방의 개입으로 장기화되면서 무기에 대한 수요는 급증

하는 반면 “전략적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무기 지원이 없어 러시아에 있어서 북한은 유일한 무기공급자라고 할 수 있다.

- 2015년 현영철 군 총참모장의 처형도 러시아에 신형무기 구입차 갔다 돌아온 이후 발언 탓으로 알려 지고 있다. 북한은 평소 러시아산 최신 방항공레이더, S-400 요격미사일체계, 전투기, 잠수함 등 자체 개발에 한계가 있는 무기 구입을 희망하였다. 북-러 간 군사기술 분야 협력 강화로 북한은 러시아의 최첨단군사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6.25전쟁 이후 근 60여 년간 자체로 국방력을 강화해 온 북한에 있어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은 무기 기술의 완성을 위한 중대 계기로 된다. 현재 북한의 무기 기술이 80% 수준이라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 100% 수준으로 제고 가능하다.

6) 현대전 숙달

- 러-우 전쟁은 단순히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 최신무기 구입, 외화벌이 기회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베트남과 중동 전쟁 이후 현대전 경험을 가진 군 장교들과 병사들이 모두 퇴역한 상황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 증가는 북한으로 하여금 현대전 경험을 가진 군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절실히 필요하게 한다.
- 만일, 러-우 전쟁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전장에서 싸울 병사가 급히 요구된다면, 그 대가를 러시아가 후하게 치르겠다고 약속한다면 북한이 군인들의 파병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난 체첸전쟁 시에도 북한의 벌목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체첸전쟁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 국제적인 시선을 피해 북한이 “근로자” 형식으로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러시아가 현지에서 군복과 무기를 제공 후 전장터에 투입한다면 북한은 외화와 함께 현대전의 고귀한 경험을 얻고 자신 있게 “통일대전”에 나설 수도 있다.

7) 해외근로자 파견 창구

- 북한과 러시아는 다 같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국가들이다. 제재 대상국들이라는 공통점과 전략적 이해관계의 공통점 등은 북-러가 해외근로자 파견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은 러시아로 하여금 군 징집을 필요로하며 군 징집은 러시아 국내에서 인력 감소를 유발한다.
- 러-우 전쟁 전에도 러시아 원동지역은 원래부터 인력난이 심하였다. 러-우 전쟁으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전후에도 인력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인력 수출의 중요한 창구이다.

8) 북한의 선택

- 북한에 있어서 러-우 전쟁은 북한에 “황금 소나기”를 내려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일 것이다. 북한은 러-우 전쟁을 통하여 최신군사기술 전습, 최첨단무기구입, 외화벌이 시장이라는 3대 요소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외화벌이 등 다각적 차원에서 러-우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를 위해 두 나라 정부 간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도부 간 소통에 이어 실무급 토의와 교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북·러 밀착의 전망

1) 군사기술 분야

- 군사기술 분야에서 북-러 간 협력이 어느 때 보다 강화될 것이고, 그 정도 및 수준은 러-우 전쟁의 강도에 비례 내지 러시아의 전황에 반비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의 촬영 해상도, 신호 암호화 및 전송 기술 등과 GPS 기술 전습, 고성능 첨단재료 생산기술 등에서 획기적 진일보를 이룰 것이다.
- 군사기술 전습 및 교류를 위해 유학생 파견, 과학자 교류 및 기술전습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들이 예상된다. 또한 군사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군인교류도 예상된다.
- 실무급에서의 토의와 이행을 위한 접촉과 교류, 왕래도 예상된다. 노동당 군수공업부, 북한 외무성, 국방성 고위급 인사들이 접촉과 교류, 왕래에 적극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첨단무기 이전

- 북한은 그동안 그토록 구입을 희망한 러시아제 첨단군사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과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지난 시기 손에 넣고자 하면서도 넣지 못하였던 1,000Km 탐지능력의 반항공레이더, 4.5세대 이상 첨단전투기, 잠수함, 극초음속미사일,

S-400 반항공요격체계 등 북한이 필요한 무기들을 하나하나 구입할 것이다.

- 북-러 간 무기 이전과 대가성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첨단무장장비들의 가격이 비싼 만큼, 북한의 외화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은 무기 제공, 인력 수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무기 주문 생산

- 러-우 전쟁에서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무기체계가 비슷하고 생산성이 좋은 북한에 러시아가 필요한 무기들을 장기 주문할 수 있다. 그러한 무기들로는 포탄, 미사일, 각종 소총과 기관총, 수류탄 등과 군복 등도 주문 가능하다.
- 러시아는 무기 주문과 함께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여 무기생산용 원부자재 및 설비들과 전력, 식량, 식용유, 술 등 생산과 군수공장 노동자 소비품을 공급하면서 주문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4) 해외근로자 파견 확대

-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먹히지 않는 북-러 두 나라가 근로자 파견에서 협력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에 있는 인력들의 순환 귀국 조치와 함께 중국 등 타국에 파견되었던 인력들을 다시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다.
- 북한은 러시아에 파견하는 근로자들의 업종도 확대해 나갈 것이

다. 현재의 벌목, 건설에서 식당, 서비스, 가공 및 제조업 등 인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인력 파견 업종들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끝//

제3세션

남북관계

발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 한반도: 북한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정영철(서강대 교수)

토론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제3세션: 남북관계_발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 한반도: 북한의 정세 인식과 남북관계 전망

정영철(서강대 교수)

1.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동북아 정세

○ 세계 질서의 요동

- 미-중 갈등: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갈등?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
-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두 개의 전쟁
- 이를 둘러싼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러 중심의 진영 간 갈등
-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러 중심의 진영이 과거의 냉전과 같은 '진영' 갈등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동시에 이들이 과연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지도 불분명

○ 동북아시아의 정세

- 한-미-일 vs 북-중-러의 갈등 구조의 형성과 강화
- 북핵 및 미사일 등 소위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공고화: 교착
- 문제는 우리 정부의 미국 편향적 외교 및 동맹 중심의 질서 해석; 즉, 현재의 우리 정부는 현재의 세계질서를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형성의 '행동대장'격의 정책 지향을 보이고 있는 점

- 이에 따라 러시아, 중국을 자극, 그리고 북한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 혹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결과적으로 현재의 북한 행동의 절반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2. 북한의 정세

1) 하노이 이후, 8차 당대회의 결정

○ 하노이의 좌절

- 2012년 김정은의 발언: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 김정은 초기, 핵과 미사일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이면에는 경제건설 – 인민생활 향상이 당면 최고 과제로 제시 – 2017년 '핵무력 완성' 이후, 2018년부터의 급격한 유화 정책
- 2019년 하노이 좌절 이후, 당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강조 – 이어, 제8차 당대회에서 외부 변수(객관 조건)을 내적 역량(주관적 요인)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고,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선회
- 이는 두 가지를 의미: 첫째, 2018년 채택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서 '인민생활 향상' 즉, 경제건설을 당면의 최고 과제로 하는 노선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 둘째, 당시 전원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군사력의 첨단화 등을

통한 안보의 자력 해결, 즉, 미국의 선의와 북한의 (선)양보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

- 이러한 북한의 하노이 이후의 행보는 제8차 당대회에서 규정되어 '정면돌파전'을 장기적인 노선으로 놓고, 여기에 국방력 및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식화 – 이를 '신'병진노선이라고 규정(?); 그러나 병진노선으로 규정하기에는 국가 자원의 분배에서의 변화가 없고, 권력구조에서의 변화도 없으며, 군사분야의 돌출 현상도 발견되지 않고 있음.

○ 8차 당대회 다시보기

- 2021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
- 핵심기조: 김정은 시대 사상적 좌표의 완성 – 우리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 최고의 목표: 인민생활 향상 – 이를 위한 과제: 평화적 환경 + 당 사상사업의 강화(평화적 환경: 대화 전략 → 국방력 강화를 통한 평화)
- 경제발전의 좌표: 자강력제일주의에 기초한 주체역량 강화를 통한 내부자원의 동원
- 당 규율과 질서의 강화 + 내각의 강화: 과학과 현실의 결합
- 각 분야별 계획 및 과제의 확립, 집행의 계획 수립과 실행
- '통일' 문제의 변화: 남북관계의 재규정 – 국방력 강화를 통한 평화적 환경 마련 +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에 임할 것을 천명

○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자력부강 전략

- 1차적으로 당 및 당 조직들의 강화: 세포비서대회 및 시군 책임비서 강습회 등
- 당의 조직 규율의 강화: 관련 부서의 강화 – 검열위원회 강화, 규률조사부 신설 등
- 당 일군의 사상 및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실력 제고
- 경제 계획의 강화 및 금속/화학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 추진 – 결국, 농업과 경공업 지원의 성격이 강함.
-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특징: 계획을 무리하게 설정하고 추진하지 않음.
  * 과학적 계산, 현실적 타산 등에 기초한 현실성 있는 계획
  * 2023년이 정비보강의 마지막 해: 이후, 본격적인 생산으로 전환

○ 국방력 강화
- 핵 무장력 강화
- 다양한 수준의 미사일 등의 개발과 실전배치
- 핵잠수함 진수 및 실전 배치 등
- 최근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 남북관계
- 남한의 정권 교체 이후, 각자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출현
- 북한은 2018년 이후, 서울을 경유한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 경제건설에 돌파구를 열고자 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노이 교착'으로 인해 이러한 선택이 좌절. 이에 따라 김정은은 2012년 4월 "다시는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에서, 2019년 전원회의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

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라고 강조함. 이는 결국 2019년의 '하노이 교착'에 따라 2018년의 선택이 좌절되었음을 의미

- 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를 시대적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하였고, 우선적으로 국방력강화를 통한 평화적 환경의 마련과 '근본문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할 것임을 표명 - 특히, "현 시점에서 남한 당국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북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할 것"이라고 하여, 근본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태도와 입장, 행동 등을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
-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로 본다면, 한국 정부의 지금의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나아가 남북관계에 대한 '강 대 강'의 입장을 강화할 것임이 분명

2) 자력갱생의 성과와 한계

○ 하노이 이후, 그리고 코로나: 극한의 자력갱생 - 내부 자원 중심의 발전

- 하노이 이후, 그리고 8차 당대회 이후, '정면돌파전'
- 북한의 자력갱생: 하노이 이후, 국제적인 봉쇄망 해제의 실패, 국제제재 등을 장기적인 상수로 놓는 전략(미국과의 장기전) - 결국, 북한의 자력갱생은 제재 해제가 실패한 이후, 북한의 스스로 선택한 전략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강제된 전략이라는 두 측면이 모순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김정은 등장, 개방특구의 확대, 세계 경제로의 진입 시도 등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변수 - 하노이의 실패는 김정은 초기의 개방과 세계화의 전략이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 북한의 선택지는 자력갱생 이외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

○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그럼에도 과거의 정치적 자력갱생과의 차이는 과학적 자력갱생: 과학기술의 강조 - 7차 당대회에서 과학기술강국건설을 강국건설의 5대 기둥의 하나로 설정
- 사회 내부적으로는 과학자 및 교육자 우대, 과학기술에 기반하지 않는 자력갱생에 대한 강력한 비판, 그리고 군수의 민수로의 전환 등이 자력갱생과 결합
- 동시에, 경제계획 등에 있어서도 과학성과 현실성의 결합
- 강력한 봉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내부적으로 쌀 값등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되어 있고, 환율의 변동폭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경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품 등은 제한적인 교류가 지속된 것으로 보임(올해 11월부터 신의주-단둥 노선 재개, 우선 화물 운송 시작, 이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신냉전으로의 국제질서 인식, 중-러와의 결탁 강화/ 전방위적 협력 강화

- 북한의 중-러와의 결탁 강화는 2018년 이후, 급속도로 진전
- 또한, 미-중 갈등, 미-러 갈등의 와중에서 중-러와의 결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

- 최룡해 위원장의 발언(2019년 아제르바이잔 비동맹회의 공개연설):
  "현 국제정세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처음 태여나던 동서랭전의 초시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새로운 랭전의 유령이 배회하고있는 현실은 쁠럭불가담운동이 각성하여 반제자주, 반전평화, 단결과 협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정은 시정연설(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신랭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수 있다고 분석하시였다.

-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김정은 연설(노동신문)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였다"

-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북한은 현재의 미-중갈등 및 국제 정세를 '신냉전'의 구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중-러 밀착관계의 강화 및 북한의 독자적인 자율성의 강화의 기회로 보고 있는 듯이 보임
- 실제, '신냉전'의 흐름은 북한에게 행동의 여지를 넓혀줄 것이며, 중-러의 묵인 혹은 암묵적 지지에 따라, 자율적인 행동을 취할 공간이 넓어질 것임. 현재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도 유엔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제재는 중-러의 반대에 의해 가로막혀 있음.

3) 안보와 발전의 두 마리 토끼 잡기

○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조의 심화와 우려

-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중 관계의 회복 및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전승절 기념식을 통해서는 북-중-러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음.
- 특히, 러시아의 주북대사인 마체라고는 '북-중-러'의 연합훈련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전승절 기념식에 참여한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양국간의 군사적 협의의 강화를 합의하기도 하였음(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
- 이런 상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밀착과 함께 북-중-러의 밀착을 통해 냉전적 대립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군사적인 긴장만이 아니라 남북 간에도 대화와 접촉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이러한 대화와 접촉의 축소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의식의

강화 및 우리 내부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역사 갈등 등과 겹치면서 북한/통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매우 큰 상황

○ 결국 북한으로서는 한편으로는 경제살리기 노선에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의 강화, 중국을 중심으로는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임

- 지난 전승절 기념행사: 러시아 국방장관 방문, 이후, 김정은의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 후속조치로, 러시아 외교부장관 방문 – 곧 이어 북-러 경제과학실무회의 등 진행: 즉, 북-러 간 군사분야 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협력의 강화
- 중국 역시 전승절 대표단 파견, 정권창립일 정부 대표단 파견: 김정은-시진핑 친서 교환을 통해 지역발전 및 평화에 대한 의견 교환 등

○ 남북관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최소한 현 정권에서는) 현상유지 혹은 남북관계에 선 양보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결탁구조에 대응하여 '북-중-러 결탁 강화의 길을 선택

3.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전망

1) 대한민국의 등장

○ 최근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호명하고 있음.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 하나는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두 국가' 전략으로 해석, 다른 하나는 서로의 공식 국호가 이전에도 이미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별 다른 변화가 아니라는 해석

- 김여정의 경우, 지난 7월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라는 표현 - 강순남(국방상), 지난 7월 열병식 연설, '대한민국 역적들', '대한민국' 표현 - 8월에는 김정은의 해군사령부 방문, '대한민국' 깡패우두머리라는 표현, 이어, '전군지휘훈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라는 용어를 사용 - 9.19 군사분야합의서 파기와 관련한 북한의 국방성 성명(11월 23일)에서도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 〈대한민국〉 족속, 〈대한민국〉것들이라는 표현 등장

- 그간 남북의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등에서는 서로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북한의 주요 지도자 및 지휘관의 공식 연설이나 담화, 공식 성명 등에서 '대한민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등장함
- 분명한 것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타격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동시에 〈대한민

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들, 정치 깡패무리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 정권과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음.

○ 북한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공식 이데올로기화 역시 기존의 '민족'중심의 시각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 즉, 남북관계의 국가성 및 국주의 시각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

- 북한의 경우, 김정은 집권이라는 〈혁명 3세대 혹은 혁명 3.5 세대〉의 집권은 과거와 달리, 남북한 관계에 대해 달라진 사고와 접근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전의 〈통일 지상주의〉로부터의 탈피는 필연적임
- 최근의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언급은 앞서 말한 바, 북한 역시 3세대, 4세대가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 역시 '민족'적 감정에 깊이 얽매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이고,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동일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에 대해 더 자유로운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8차 당대회 당 강령에서 과거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등의 용어가 삭제된 것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북한 역시 남한에 대한 인식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2) (선) 양보 없는 대결 체제

○ 8차 당 대회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없음. 이미 2019년 하노이 이후의 강경 기조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

- 즉, 2018년의 대격변을 통해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종전선언),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제재의 해제와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의 재추진 및 강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했던 선택이 좌절되었음을 의미
- 사실, 남북의 이러한 좌절에는 남북한 관계에 대한 자율성의 심대한 제약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 즉, 북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켰던 한계,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미관계에 따른 자율성의 제약 등이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한국정부의 주도성 혹은 자율성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는 현 남한 정권의 행보와 연관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 즉,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일 밀착관계가 한-미-일 동맹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북-중-러의 반발 및 밀착관계의 강화가 뒤따르고 있음
- 이미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적대감을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대남 정책의 정당성(강경 혹은 무관심)을 강화시킬 것이며, 아울러 북-중-러 강화를 통한 냉전적 대립 구도를 강화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임

○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보
-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파기는 이미 예정된 행로로 보이며, 이번의 군사정찰위성의 발사는 이러한 상호 간의 입장을 공식화한 계기일 뿐.
- 하노이 이후, 북한의 행보는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각 분야의 5개년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행에

남북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계획대로 분야마다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또한, 남북관계가 북한의 행보 및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앞으로도 그간의 남북 합의에 크게 얽매임 없이 각자의 길을 갈 것으로 보임

3) 앞으로의 전망

○ 남북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대결 구도는 심화

-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남북 문제의 국가화〉의 심화? 혹은 국내 정치화의 심화 -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가는데서 더욱 어려운 구조의 형성
- 북한은 2023년을 정비보강계획을 완수하는 것으로 설정, 올해의 경제적 성과에 토대하여 2024년에는 본격적인 경제건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옮겨갈 듯 - 실제 성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움(곧 열릴 전원회의에서 총화)
- 결국 2024년에도 북한은 남북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두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갈 길을 갈 것?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심화될 듯

- 이번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파기된 상황에서, 이전까지의 행동의 제한을 넘어 군사분계선 및 접경 지역 등에서의 군사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 남북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듯(이미 시작? 비무장지대의 GP 복원 등 - GP의 현대화? 등등)

- 또한, 정찰위성 발사와 함께 남북의 군비경쟁의 본격화?
- 다만, 북한으로서는 4월의 총선, 11월의 미국 대선 등을 보면서 행동의 폭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음.
- 이번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계기로,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한 만큼, 올해 말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다수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내놓을 것이고, 군사분야에서도 첨단무기 개발 및 실전 배치 등이 공언할 가능성이 높음.
- 그리고 그 방향은 올해 9월 개정된 헌법에서도 보이듯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 역시 군사분계선 및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 –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삐라 살포, 드론 정찰 등의 행동은 충돌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임
-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북 간 상호 간 거친 '말싸움'이 오고 가고 있고, 현재는 상대방에 대한 위협과 자신들의 정당성 주장의 차원이지만, 동시에 2024년 거친 말싸움이 행동으로 옮겨갈 위험성이 존재함.

○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남북 간 긴장의 고조와 함께 대화의 국면이 열리기도 하였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대화와 협상으로 나아갈 계기와 그럴 필요성이 별로 보이지 않음.
- 이미, 두 개의 전쟁이 진행중이고, 이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미국과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으로 편향되고 있으며, 이런 조건에서 대화와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은 쉽지 않을 듯

4. 남는 문제는?

○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의 심화/ 남북 문제의 국가화의 심화 과정

-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잘 모르겠음. 대북정책이 존재하는지도 애매함.
- 담대한 구상? -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대한 구상인지도 잘 모르겠음.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미국에 편향된 외교정책과 그 힘에 기초한 대북 억압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이런 맥락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 등)
- 이 과정에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남북관계에서 남북의 자율성을 축소시킨다는 점 - 더욱이 남북 문제가 점차 '국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문제에서의 자율성이 축소된다는 것은 향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 남한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중요 - 남한의 남북문제에서의 정치적 자율성 확장

- 결국, 남한이 향후, 남북문제에서 최소한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 - 이는 결국 국내정치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지점
-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엄격하게 평가하자면 '우리 정부의 자율성 확보의 실패와 합의 사항의 미이행, 이에 따른 및 북한의 남한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귀결 -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2019년 신년

사, 개성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능)

- 결국, 북한은 남한이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 구도의 심화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일련의 행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수의 하나는 결국 남한 정치의 문제
- 더욱이 현재 남북관계는 중재자가 없는 상태이며,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임, 따라서 중재자가 없고, 상호 갈등과 대결의 한 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과 대화는 당분간 어려워 보임

제3세션: 남북관계_토론 ❶

토론문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 한반도: 북한의 정세인식과 남북관계 전망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교수)

1.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가?

○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합의

- 우리는 어떤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 상상해야 하는가?
- 2018~2019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합의의 부재

○ 패권부재의 시대, 전쟁의 시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동시 진행은, 패권부재의 국제질서의 증거: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2022년), '중국제조 2025'(2015년)로 대표되는 경쟁적 보호주의의 출현은 패권부재의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시기와 유사
- 친미진영 대 느슨한 '비미/반미진영'(BRICs 11개국으로 확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 동북아 국제질서는 한미일 대 느슨한 북중러의 대립구도: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대러 밀착을 선택하며, 등거리외교에서 이탈; 미국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투표에서 러시아 편에 선 5개국 가운데 하나가 북한

○ 한국의 대외정책은 어디로?

- 자율성 대신 대미 총력 편승의 안보·경제정책: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가속화; 대중 수출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 반면 대미 수출은 2003년 수준으로 20% 선에 육박하며,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역전할 가능성
- 대북정책의 부재
- 대외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양극화
- 한국 대외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율성을 추구해야 하는가?; '힘'을 통한 평화, '경제적 진영화'를 통한 번영

2. 북한에 대한 진보·보수의 '확증편향'

○ 북한의 핵국가 되기 인정투쟁

- 2018년 4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국가'의 '경제발전전략'을 제시: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의와 닮은 꼴
- 2018년-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붕괴하면서, 북한은 '제2격 능력' 확보에 집중: 핵무기 등장 이후, 소련(러시아)과 중국에 이어, 힘의 절대적 비대칭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제2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 약소국의 강대국 모방 전략(?)

- 핵추진 잠수함은 game changer가 되는 것인가?
- 2022년 9월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과 비핵화 의제의 증발

○ 핵국가의 경제성장전략
- 교육개혁, 제도개혁, 기술혁신을 통한 내생적(endogenous) 성장이론을 추구하면서도,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주도 성장론에 대한 유혹은 존재
- 핵국가로 인정받을 때, 외자주도 성장론, 수출주도 성장론이 가능: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을 포함한 수출의 기회, 식량 및 원자재의 수입의 기회를 제공
- 북한은 어떤 조건 하에서 핵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북한이 핵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인가?

○ 북한의 국제질서 인식
- 신냉전과 다극세계의 공존: 미중경쟁, 국제질서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개념화
- 핵국가 북한의 등장이 미국 "일극세계"의 종언을 촉진한다는 북한식 주장: BRICs가 미국의 "일극화"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주장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힘을 통한 평화의 북한판 담론: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당 규약에서의 삭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남북문제의 국가화"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3. 어디로 갈 것인가?

○ 한반도에서 군비증강의 정치경제학, 심리학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평화운동은 불가능한 기획인가?

○ 한반도 미래의 예상경로: (1) 안보딜레마의 가속화와 일상화; (2) 기능주의적 방법의 부활; (3) 북한의 핵억제력 인정과 상호 확증파괴의 합의; (4) 북한민주화의 길; (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제도적 합의 등등

제3세션: 남북관계_토론 ❷

토론문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2023년 북한 정세 평가

○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대외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냉전적 갈등구조를 적극 활용하려는 이른바 '신냉전 구조 활용 전략'

-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미러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주목하여,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
- 2023년 7월 김정은 위원장은 중러 대표단을 좌우에 세워놓고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을 거행하여, 북중러 연대를 시사하는 장면 연출
  * 현재의 긴장격화된 국제정세가 군사력 증강에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 (2022년 시정연설)
- 현재까지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론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
  *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
  * 북한의 핵과 전략무기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부재
  *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협력이 없다면 기존 제재의 효과 축소 우려

〈표 1〉 UN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기초한 북한 정제유 반입량 추정치(천배럴)〉

구분	중러 공시 수출 UN보고량	UN감시 불법반입 추정치	총반입량 (보고량 +불법반입)	UN제재 제한량 (UNSC2397)
2018	401	3,030	3,432	500
2019	467	4,543	5,010	500
2020	149	5,500	5,649	500
2021	92	657	749	500
2022	110	932	1,042	500

* 신정수, "팬데믹 전후 북한 에너지 수급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23.9), p.79를 기초로 재작성.

○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 전략 관련 2023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북러밀착

- 북러밀착을 통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압박할수록 북한에게 기회가 열리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장기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
- 김정은에게 북러밀착은 지나치게 높아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미 서방 경제제재 대상인 북러 연대를 통해 제재 우회 돌파구 마련의 의미

  * 관광은 대북제재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러시아는 관광비자 간소화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켜 북한 주민은 최대 6개월 무비자 체류 가능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김정은은 국제정세가 '다극세계'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2022년 시정연설), 이는

탈냉전기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이었던 미국 중심 외교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

- 미국 중심 단극체제 하에서 북한 대외정책의 초점은 북미관계였지만, 북한이 현 국제체제를 다극체제라고 인식하면서 북중, 북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
- 군사적 긴장 조성 이후 협상국면 전환이라는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 북미·남북관계 긴장국면 장기화 우려

○ 2023년 북한은 국경 개방을 통한 북중무역 정상화를 시도

- 2023년 상반기 대중 수입은 9억 2,395만 달러, 수출은 1억 3,509만 달러로 코로나 이전인 2018~19년 수준을 거의 회복
  * 2018~19년 상반기 평균 대중 수입액은 10억 6,752만 달러, 수출액은 1억 664만 달러와 비교하면 각각 86.6%, 126.7% 수준
- 2023년 상반기 대중 수입품목 1~3위는 사람 머리카락, 비료, 쌀 순서였으며, 동기간 대중 수출품 1위가 가발, 가수염 등이라는 점에서 중북 간 임가공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

○ 군사적으로는 핵 보유를 헌법에 수록하고, SLBM 탑재 잠수함을 공개하는 한편,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에 박차

- 2023년 2번의 실패 끝에 11월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향후 추가 위성발사를 지속할 것임을 공언
- 2023년 김정은은 해군절과 항공절에 각각 해군사령부와 공군사령부를 방문하여 해공군을 격려
  * 2022년 이례적으로 대규모 항공기를 동원한 항공공격종합훈

련 실시에 이어, 해공군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을 시사

○ 대남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남북관계가 신뢰나 선의가 기본이 되는 민족 내부 간 관계가 아니라 냉정한 국익으로 평가되는 국가 간 관계라는 점을 시사

-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반발하여 전면 무효화를 선언

2. 2024년 남북관계 전망

○ 2024년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하반기에 예정된 미국 대선 등 주요 국가 선거

-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시작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예정
-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북한으로서는 임기 말 미국 정부와 협상하기보다는 미국 대선 이후를 기대하면서 기존의 강경기조를 이어갈 가능성

  *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지와 무관하게, 워싱턴 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목소리 증가 가능성

○ 러-우 전쟁 장기화 및 중동정세 불안정 지속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할 우려

-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여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

가 핵심 변수인 바,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소한 미국 대선 이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간 동안 북러 협력은 지속될 전망

- 북러 간 정찰위성 등 군사부문 첨단 기술 이전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크게 악화 우려가 있으나, 북러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

○ 2024년 북한은 코로나 이후 지속되어 온 셀프 국경봉쇄를 해제하고 국경을 개방하는 한편, 해외공관들의 평양 오피스 재개에 나설 가능성

- 특히 북한은 북중국경 개방을 통한 관광사업 재개, 북러관계를 활용한 노동자 송출 등에 나설 가능성

  *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흡기 관련 질환의 치명도·확산도 등에 따라 북한의 국경개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유럽 국가들의 경우 순차적으로 평양 주재 외교공관 재개에 나설 것이나, 그 시기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

  * 서구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부정적 입장,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에 대한 외부의 의구심, 서구 국가들의 외교행정 프로세스 등을 고려 필요

○ 남북관계 측면에서 이미 북한은 남한의 돈과 물자가 들어있는 어떤 지원이나 사업도 수용·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2024년 이후, 최소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지속될 전망

- 핵무기를 사용한 대남 위협은 더욱 잦아지고, 노골적으로 변

화할 가능성

- 9.19 군사합의의 규정력 약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등 이후 접경지역 등에서의 국지충돌 우려 증가

제3세션: 남북관계_토론 ❸

토론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핵심 질문들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2023년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특징

○ 억제와 단념

- 북한과 대화(Diplomacy)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Deterrence)와 단념(Dissuation)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3D'에 기반한 대북정책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제재 등 종합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제압하려는 데 초점
-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12.11)에서 '대북 新이니셔티브' 구상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해킹 및 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등을 더욱 차단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도 같은 맥락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절도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

○ 인권과 통일준비

- 3D 전략과 더불어 인권, 미래 통일준비를 대북정책의 우선 어젠더로 내세우고 있는 점도 도드라진 특징
- 군사력, 인권, 제재, 국제공조 등 모든 압박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갑작스런 통일까지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읽힘.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2월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외교·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며 본격적인 통일준비에 나서겠다고 언급

○ 북한 정권 종식 지향(?)

- 이런 인식과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 북한 정권 종식이라는 표현이 수시로 노출
  * 윤석열 대통령은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9월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

○ 전임 정권의 대북정책은 가짜평화로 규정

-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들은 가짜평화론으로 규정. 핵을 가진 북한과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어불성설이며 대북 군사적 억제와 한-미 동맹 강화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머리발언에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

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고 단정한 바 있고, 6월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는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

* 박진 외교부 장관도 10월 5일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

○ 뉴라이트의 영향

- 이같은 대북정책 방향설정에는 주사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뉴라이트 계열 주요 인물들과 이들이 주장해온 역사관, 이념과 가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대미, 대일 추종 외교, 진보정권=좌파로 규정하고 배격, 자유민주세력 대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극단적 대결 의식 등이 그대로 대외·대북정책에 반영

□ 한계와 문제점

○ 과도한 적개심 유발과 핵무력 강화 정당성 강화

-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와 완강한 대화거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식과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지만,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적개심을 유발시키고 핵무력 고도화 등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도 유의
- 북한측은 미국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와 한국, 일본 등의 군비증강을 자신들의 핵억제력이 이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쟁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담보라면서 핵무력강화노선의 정당성을 꾸준하게 주장

- 한미 군사훈련과 군비확장은 자신들의 자주권, 발전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고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
-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해 핵무력 고도화에 더욱 매진
  * 9월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고 '비핵화'는 더는 협상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

○ 출구전략과 위기관리전략 부재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출구전략과 위기관리전략이 안 보이는 상황. 대화와 타협하는 자세는 보여지지 않고 오로지 압도적 힘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고 필요하면 군사적 충돌도 감수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견지

○ 남북관계 자율성 축소

- 남북 간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상황이라 남북한 스스로의 역량에 의한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한미일 공조에 더욱 종속된 남북관계의 한계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핵심 질문들

○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힘(무력)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방법 외 대안이 없는가.

○ 한미일 군사협력 등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인가.

○ 남북한 상호 간 오인, 오해,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 정부의 전쟁 예방외교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확장억제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

○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왔는가.

○ 현재 북한 내부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등
=> 핵심 질문들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임

□ 2024년 남북관계 전망

○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개선 난망
- 비핵화는 한반도 관련 모든 이슈의 출발점으로서, 일종의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으로 간주. 더 큰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나머지 문제가 자동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가기를 기대

-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아래에서는 비핵화 진전이 이뤄져야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게 된 상황
- 현정부의 대결적 대북관 등을 고려하면 현 정부 임기 내 비핵화 진전 또는 김정은 체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가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시사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2월 보수 성향의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에 기고글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 등

○ 낙관론의 근거 부족
-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로 미국 대선, 남한 총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미중간 전략경쟁 완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이 거론. 물론 이 변수들이 직간접적으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핵심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
- 북한의 강경한 핵고수 입장과 정면승부 기조, 이에 맞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비타협적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낙관론을 펴기는 쉽지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
- 2024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고 강도 높은 한미, 한미일간 연합군사훈련 실시가 예정. 복잡한 정치일정과 맞물리면서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
  * 한미는 11월 13일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18개 조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발표. 골자는 한반도에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들까지 동원해 앞으로 수많은 훈련을 하겠다는 것. 한반도에서 한미연합훈련, 한·미·

일 연합훈련, 야외기동훈련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유엔사의 연합훈련이 연중무휴로 진행될 예정

* 한미는 이번 SCM 공동성명 6항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8항에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14항에서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적시

-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무력 강화와 비타협적 대응 기조와 더불어 정파적 이익 추구와 정치세력의 양극화 그리고 타협정치 부재로 나타나는 국내정치의 난맥상이 2024년 정세 불안정 가중

○ 대남 무시 정책 지속

-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굳이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집중할 것이고, 대남 무시 정책(군통신선 차단 등 남한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입장 고수, 남한을 상대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 사용)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남북한 군비 경쟁 가속화와 안보딜레마 심화

- 2024년은 남북한이 동시에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을 추진하면서 우주공간뿐 아니라 공중, 해상, 육상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호 간 군비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안보딜레마 심화 예상
- 동시에 북한은 우주개발권리 등에 대한 이중기준 철회, 주권적 권리행사 인정 투쟁 지속 전망

*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11.29 당 중앙위원회 김여정부부장 담화)

○ 9.19 합의 파기에 따른 남북한의 상호 적대적 행동 심화, 우발적 충돌 위험 배가

-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한 상호 충돌 위험은 배가

  *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 (11.23 국방성 성명)

- 다만 내년 초반에는 남한에서의 4월 총선을 의식한 절제된 도발이 예상. 이는 자신들의 과도한 도발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북풍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

  *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발하게 되면 심각한 통치위기로부터의 탈출구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패당의 또 다른 흉심”(‘류경’ 논평, 12.4)

○ 남북교류협력 단절의 장기화와 독자적 개발 및 운영

-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함께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잔해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 반면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 30개 정도를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금강산관광사업에 이어 남북경협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개성공단 개발운영 기조 전환을 시사

□ 우리의 과제: 리스크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보다 집중할 시기

- 억제는 정확한 의사전달을 전제로 작동. 능력과 의도가 있어도 이를 적대국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억제가 작동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잉 공포와 대응을 유발
- 억제력 강화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릴 경우 역설적으로 충돌과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우를 범할 수 있음도 유의
-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멸을 막기 위한 북한과의 전략, 전술적 타협 모색이 필요

  * 일본 정부가 대북 군사적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북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 접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 주목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대북 원칙을 복원하는 것이 긴요

- 더불어 남북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 의해 위임된 것이고 그에게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북한연구 시리즈

1. 북한평론 박재규 저 1975
2. 북한외교론 고병철 외 공저 1977
3. 북한무역론 공산권경제연구실 편 1979
4. *The Politics of North Korea* Jae Kyu Park et., eds. 1979
5. 북한군사정책론 박웅서 외 공저 1983
6. 북한정치론 박재규 저 1984
7. 북한의 대외정책 박재규 편 1986
8.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Jae Kyu Park et al., eds. 1987
9.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고현욱 외 공저 1987
10. 북한의 법과 법이론 최종고 외 공저 1988
11.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정상훈 외 공저 1990
12.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양재인 외 공저 1990
13.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김일평 외 공저 1991
14.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건설 고병철 외 공저 1992
15.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최청호 외 공저 1993
16.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황의각 외 공저 1995
17.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Jae Kyu Park ed. 1999
18. 인터넷과 북한 연구소 외 공편 2000
19.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함택영 외 공저 2000
20.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서대숙 외 공저 2002
21.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4
22. *North Korea and the World: Explaining Pyongyang's Foreign Policy* Byung Chul Koh ed. 2005
23.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6
24. 북한의 노동 양문수 외 공저 2007
25.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7
26.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8.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윤대규 편 2008
29.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윤대규 편 2008
30. *The Dynamics of Change in North Korea: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Phillip H. Park ed. 2009
31.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윤대규 편 2010
32.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윤대규 편 2009
33.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34.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35.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이수훈 편 2011
36.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이수훈 편 2011
37.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 이수훈 편 2012
38.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 이수훈 편 2012
39. *Nuclear North Korea: Regional Dynamics, Failed Policies, and Ideas for Ending a Global Stalemate* Su Hoon Lee ed. 2012
40.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편 2012
41.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수훈 편 2014
42.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윤대규 편 2015
43.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연구소 편 2015
44.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윤대규 편 2016
45.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윤대규 편 2016
46.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7.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8. *Rebuilding North Korea's Economy: Politics and Policy* Phillip H. Park 2016
49.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 임을출 저 2016
50. 북핵, 오늘과 내일 연구소 편 2016
51. *North Korean Tourism: Plans, Propaganda, People, Peace* Dean J. Ouellette 2017
52.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신석호 외 공저 2018
53.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이관세 저 2019
54.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북대북한연구회 편 2019
55.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이관세 저 2020
56.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소 편 2020
57.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박서화 저 2021
58.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101가지 질문·답변- 연구소 편 2021
59.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박서화 저 2021
60.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계승과 변화 임을출 저 2021
61. 북한행정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최영준 저 2022
62. 북한 사회주의심리학의 이해 이형종 저 2022
63.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이병철 저 2023
64. 트럼프-김정은 친서를 통해 본 북미회담의 A to Z 이정철 저 2023
65. 신진연구자가 본 김정은 체제 강혜석 외 공저 2023
66. 북한법질서에서의 법치 개념 박서화 저 2023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1. 동아세아의 평화와 안보 박재규 편 1974
2. 「테크네트로닉」 시대의 국제정치 Z. Brzezinski 저 / 박재규 역 1974
3. *East Asia and the Major Powers: From Confrontation to Accommodation* Jae Kyu Park et al., eds. 1975
4.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박재규 편 1979
5.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ae Kyu Park ed. 1979

6. 80년대의 미소관계 L. Caldwell et al. / 소련연구실 역 1981
7. 판례중심 국제법 김정건 편 1982
8. U.S-Korean Relations, 1882-1982 Tae-Hwan Kwak et al., eds. 1982
9.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Jae Kyu Park et al., eds. 1983
10. *Korea and Indonesia in the Year 2000* Jae Kyu Park et al., eds. 1984
11. SDI와 아시아의 안보 박재규 외 공저 1987
12.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ts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Jae Kyu Park et al., eds. 1987
13. 한국과 미국 1: 정치·안보관계 안병준 편 1988
14. 한국과 미국 2: 경제관계 김덕중 편 1988
15. 한국과 미국 3: 사회·문화관계 임희섭 편 1988
16. 한·미관계의 재조명 김덕중 외 공편 1988
17. *Alliance Under Tensi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U.S. Relations* Manwoo Lee et al. 1988
18.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Ronald D. MacLaurin et al. 1989
19.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쿠친스키 외 공편 1990
20. *Current Issues in Korean-U.S. Relation: Korean-American Dialogue* Manwoo Lee ed. 1993
21. *The Changing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anwoo Lee et al., eds. 1993
22. *Culture & Development in a New Era and in a Transforming World* Manwoo Lee et al., eds. 1994
23. 위기의 세계와 한국 연구소 편 1994
24. *The U.S.-ROK Alliance in Transition* Tae-Hwan Kwak et al., eds. 1996
25.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 Tae-Hwan Kwak ed. 1997
26.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Tae-Hwan Kwak et al., eds. 1997
27.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 서대숙 편 2001
28.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이수훈 편 2009
29. 핵의 국제정치 이수훈 편 2012
30. *Northeast Asia's Nuclear Challenges* Su Hoon Lee ed. 2013
31. 동북아 新권력체제와 한반도 정책 이수훈 편 2013
32. *South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Lakhvinder Singh ed. 2014
33.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연구소 편 2015
34.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연구소 편 2016
35. 한일 관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6. 미중 전략적 경쟁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7. 북중관계: 1945-2020 이상만 외 저 2021
38.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하여 길윤형, 김용민, 조진구 저 2022

통일연구 시리즈

1.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Tae-Hwan Kwak et al., eds. 1983
2.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ae-Hwan Kwak et al., eds. 1984
3.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김한교 외 공저 1986
4.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구영록 외 공저 1986

5.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양성철 편 1989
6.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박성조 외 공저 1991
7.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함택영 외 공저 1992
8.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연구소 편 1996
9.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연구소 편 1996
10. *The Four Powers and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Tae-Hwan Kwak ed. 1997
11.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곽태환 외 공저 1997
12.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곽태환 외 공저 1997
13.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Byung Chul Koh ed. 2002
14.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연구소 편 2004
15.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Yong-Sup Han 2005
16.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North Korea Modernization Research Group ed. 2010
17.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이수훈 외 공편 2012
18. 민주화·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이수훈 외 공편 2014
19.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16
20.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연구소 편 2016
21. 분단 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연구소 편 2016
22.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21

한국연구 시리즈

1.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김호진 외 공저 1989
2.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Dae-Kyu Yoon 1990
3.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손호철 외 공저 1991
4. 인민당연구 심지연 저 1991
5. 한국정치·사회의 새 흐름 연구소 편 1993
6.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 Dae-Kyu Yoon 2010

지역연구 시리즈

1. 연방주의론: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의 무한한 다양성 Valerie Earle ed. / 박재규 역 1974
2. 미국외교행정의 진로: 미국외교정책기구심사위원회보고서 박재규 외 공역 1976
3. 비교공산주의정치론 염홍철 편역 1977
4. 전환기의 동남아세아: 지역정치 및 국제관계 박재규 편 1977
5. *Southeast Asia in Transition: Regional & International Politics* Jae Kyu Park et al., eds. 1977
6. 인도네시아 동남아지역연구실 저 1983
7. 동남아정치론 강태훈 외 공저 1983
8. 중공의 개혁정치: 구조·과정·정책 중·소 연구실 편 1985
9. 현대 일본의 정치 한배호 외 공저 1986
10. 현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안택원 편저 1986

11.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김국진 외 공저 1987
12. *Koreans in North America: New Perspective* Seong Hyong Lee et al., eds. 1988
13.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정광하 저 1989
14.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Tae-Hwan Kwak et al., eds. 1991
15. 소련 이은순 외 공편 1991
16.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한석태 외 공저 1991
17.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연구소 편 1996
18. 독립국가연합(CIS)의 이해 이영형 저 1999

제3세계연구 시리즈

1.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 염홍철 외 공저 1987
2. *State-Building in the Contemporary Third World* Su-Hoon Lee 1988
3.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이수훈 외 공저 1989
4.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이수훈 외 공저 1989
5.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이수훈 외 공저 1991
6.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김세균 외 공저 1992

번역 시리즈

1.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개정판) 페리 앤더슨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4
2. 농민혁명 제프리 페이지 저 / 강문구 외 공역 1995
3. 동원에서 혁명으로 찰스 틸리 저 / 양길현 외 공역 1995
4. 제국의 신화 잭 스나이더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6

자료집 시리즈

1. 북한자료집 김정일 저작선 1991
2. 지방미군정 자료집 1993
3. 김일성 연구자료집 2001
4.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2004
5.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연구현황 자료집 I 2006
6.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조진구 2020
7.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문서 번역과 과제 - 조진구 2021

한반도포커스 시리즈

1.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박영준 외 공저 2023
2. 미·중 전략 경쟁 하의 중국 비전통안보 해부 김상규 외 공저 2023
3.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전재성 외 공저 2023

4. 중국의 영역별 리스크 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루신지 외 공저 2023
5.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이영훈 외 공저 2023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강영훈(전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노신영(전 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 (1996. 3)

제　목: 대북정책의 기조 - 포용정책 및 비포용정책
발표자: 이동복(전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오(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전정환(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중앙일보 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 (1996. 4)

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발표자: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 우재승(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5 (1996. 6)

제　목: 4차회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정태익(외무부 차관보)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임동원(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6 (1996. 10)

제　목: 남북한 경제협력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표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진영(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이　호(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7 (1996. 12)

제　목: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표자: 박종철(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8 (1997. 3)

제　목: 잠수함 사건'사과'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이상우(서강대학교 교수)
　　신정현(경희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9 (1997. 6)

제　목: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발표자: 김정서(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0 (1997. 9)

제 목: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발표자: 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1 (1997. 11)

제 목: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발표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2 (1998. 1)

제 목: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발표자: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3 (1998. 4)

제 목: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권오기(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4 (1999. 2)

제 목: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KDI 연구위원)
차영구(국방부 대변인)
안병준(연세대 정외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5 (1999. 6)

제 목: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발표자: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6 (1999. 7)

제 목: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이헌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7 (1999. 10)

제 목: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홍관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달중(서울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8 (2000. 3)

제 목: 2000년대의 남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이상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9 (2000. 5)

제 목: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발표자: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0 (2000. 10)

제 목: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제훈(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강성윤(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1 (2000. 11)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박동환(미국 Northwestern대학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2 (2001. 2)

제 목: 북한의 개방
발표자: 서진영(고려대 정외과 교수)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3 (2001. 5)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4 (2002. 2)

제 목: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5 (2002. 8)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6 (2002. 11)

제　목: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재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7 (2003. 5)

제　목: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8 (2003. 9)

제　목: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9 (2003. 10)

제　목: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발표자: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0 (2004. 4)

제　목: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조동호(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1 (2004. 6)

제　목: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2 (2004. 11)

제　목: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평화협력원 원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3 (2005. 5)

제　목: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4 (2005. 7)

제　목: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원수(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5 (2005. 10)

제 목: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발표자: 서동만(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6 (2006. 7)

제 목: 2006년 6월 한반도: 정세와 해법은?
발표자: 백낙청(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7 (2006. 9)

제 목: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발표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8 (2007. 4)

제 목: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9 (2007. 10)

제 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0 (2008. 11)

제 목: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1 (2009. 2)

제 목: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2009. 4)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7)

제 목: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4 (2009. 11)

제 목: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표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5 (2010. 3)

제 목: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발표자: 이수혁(전 주(駐)독 대사/6자회담 수석대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6 (2010. 12)

제 목: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7 (2011. 3)

제　목: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발표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8 (2011. 7)

제　목: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9 (2011. 11)

제　목: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발표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0 (2012. 5)

제　목: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1 (2012. 8)

제　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2 (2013. 5)

제　목: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발표자: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3 (2013. 8)

제　목: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4 (2014. 2)

제　목: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5 (2014. 4)

제　목: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6 (2014. 11)

제　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자: 권명국(전 방공포병사령관)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7 (2015. 5)

제　목: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8 (2016. 4)

제　목: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9 (2016. 11)

제　목: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0 (2017. 12)

제　목: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패　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1 (2018. 4)

제　목: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2 (2018. 12)

제　목: 전문기자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발표자: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김현경(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왕선택(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3 (2019. 7)

제　목: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발표자: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4 (2019. 8)

제　목: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5 (2019. 11)

제　목: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발표자: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6 (2020. 6)

제　목: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발표자: 권태준(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이정철(숭실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7 (2020. 11)

제　목: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발표자: 이왕휘(아주대 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진희관(인제대 교수)
　　최순미(아주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8 (2021. 1)

제　목: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발표자: 정영철(서강대 교수)
　　사카이 다카시(前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자: 정창현(평화경제연구소장)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한동대 교수)
　　안경모(국방대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숭실대 교수)
김영희(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한홍열(한양대 교수)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찬우(일본 테이쿄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9 (2022. 1)

제 목: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안경모(국방대 교수)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장혜지(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계영(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0 (2022. 6)

제　목: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발표자: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이웅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토론자: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양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1 (2023. 1)

제　목: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애(길림대 교수)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웅현(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
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리난(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2 (2023. 12)

제　목: 2023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2024년 전망
발표자: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정영철 (서강대 교수
토론자: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
　　이　철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회원가입 안내

▣ 회 비

● 1년 회비

일반회원 : 50,000원, 학생회원 : 30,000원, 기관회원 : 100,000원
재 가 입 :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평생회비

개인평생회원 : 100만원 이상
기관평생회원 : 300만원 이상

● 납부방법 :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우체국 온라인 : 014233-05-000905 (예금주: 경남대학교)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를 포함,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평생회원에게는 무료 기증)

▣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우)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박현정
전화 : 02-3700-0725, 팩스 : 02-3700-0722
E-mail: pedia@kyungnam.ac.kr
Homepage: http://ifes.kyungnam.ac.kr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신청서

분 류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개인평생회원 □ 기관평생회원		
성명(기관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자택주소	□□□□□		전화:( ) -
			휴대폰 :
			E-mail :
직장(학교) 주소 및 직위	□□□□□ 직위 :		전화:( ) -
우편물발송	□ 직장(학교) □ 자택		
학력사항	대학교 과 □ 석사 □ 박사과정 학기 (학생회원) 대학교 과 □ 석사 □ 박사학위 (연도)		
전공 및 관심 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 경력			
가입권유인			

※ 굵은 선 안의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님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간행물 배송지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1) 연구소는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및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 선택항목 : 전공 및 관심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경력
2) 개인정보 수집방법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연구소는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1) 제공하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신 경우라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의 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보존되며, 이 때 보존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은 해당사유에 국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